
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

[‘26 ~ ‘30]

2025. 12. 26

관계부처 합동

■ 목 차 ■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I. 수립배경 및 경과 | 1 |
| II. 청년의 삶 현황 및 여건 | 2 |
| III. 제1차 기본계획 평가 및 진단 | 5 |
| IV. 제2차 기본계획 추진방향 | 13 |
| V. 5개 분야별 추진과제 | 22 |
| 1. 일자리 분야 | 22 |
| 2. 교육·직업훈련 분야 | 32 |
| 3. 주거 분야 | 39 |
| 4. 금융·복지·문화 분야 | 44 |
| 5. 참여·기반 분야 | 55 |
| VI. 향후 계획 | 62 |
| [참고] 분야별 과제목록 | 63 |

I. 수립 배경 및 경과

1 수립 배경

- (개요) 「청년기본법」에 따라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분야별 시책을 포함하는 5개년 종합계획인 「청년정책 기본계획」 수립(제8조)
 -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('21~'25) 수립('20), 제1차 기본계획('21~'25) 수정('23)
→ 제1차 기본계획 기간 만료에 따라 제2차 기본계획('26~'30) 수립 필요
- (절차) 국무총리 기본계획 수립 →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심의·의결
→ 중앙행정기관·광역지자체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·시행

2 추진 경과

- ❖ 간담회, 청년 라운드테이블 등 **46회 개최, 400여명의 청년** 등과 소통을 통해 **청년 당사자 관점의 정책방향 및 과제** 발굴·검토
- ❖ 청년신문고, 청년정책 공모전, 분야별 청년·전문가 간담회, 지자체 제안 등 **약 1,800여건의 청년 등의 정책 제안** 검토

- 제2차 기본계획('26~'30) 수립 연구용역 착수('25.4.3, 청소년정책연구원)
- 기본방향 및 주요의제 발굴을 위한 청년·전문가 자문 회의(4.29, 5.8), 분야별 전문가 간담회(3~5월, 8회)를 통한 개선과제 발굴·논의
- 중점 정책방향 도출을 위한 청년정책 전문가 델파이 조사(13명, 5월) 및 청년(1,000명) 대상 설문조사(6월), 청년 정책집단별 FGI 조사(7월) 진행
- 5개 분과별(일자리, 교육, 주거, 복지·생활, 참여·권리) 전문가 워킹그룹 구성·운영(5~6월)을 통해 정책과제(안) 발굴·검토
- 청년 주도의 중점전략 논의 및 정책과제(안) 검토를 위해 청년 라운드테이블 구성*(8.20) 및 5개 분과별 검토·논의(5회)
 - * 청조위원 및 실무위원, 시·도 청조위원, 청년단체, 일반청년 등 60여명 청년으로 구성
- 범부처 검토·논의 등을 통한 과제 구체화(11~12월), 공청회(11.27) 등을 거쳐 제2차 기본계획 마련 →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상정·발표(12.26)

II. 청년의 삶 여건 및 현황

1. 인구·산업·사회구조 급변 등으로 청년들은 새로운 과제 직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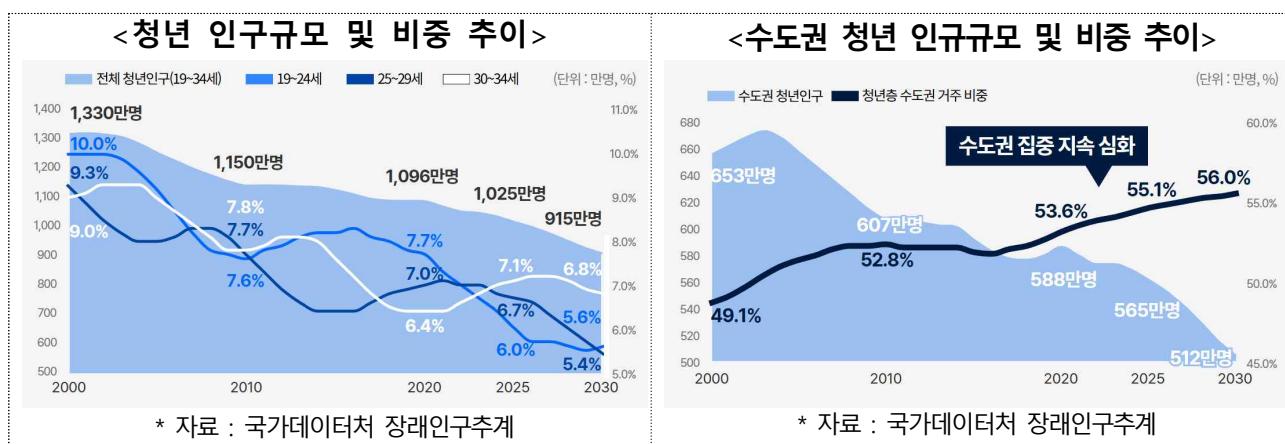
- (청년인구 감소) 저출생·고령화 추세 등 청년인구(19~34세) 규모는 지속 감소*, 전체 인구(5,175만명)의 20.2%(1,044만명) 수준('24)

* 청년 인구(비중) : ('00) 1,330만명(28.3%) → ('20) 1,096만명(21.1%) → ('30) 915만명(17.8%) 전망

- 청년인구 감소는 국가 경제의 핵심주체인 생산연령인구 및 신규취업 핵심인구 급감으로 연결
- 청년인구의 수도권 집중은 지속 심화*, 지역에는 청년인구 감소와 소멸 위험 증가, 수도권에는 생활 부담 증가 및 여건 악화

* 청년층 수도권 거주 비중 : ('00) 49.1% → ('20) 53.7% → ('24) 54.8%

전연령 수도권 거주 비중 : ('00) 46.3% → ('20) 50.2% → ('24) 50.8%



- (경제성장 둔화)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, 세계 경제 성장을 둔화 등 과거 고도성장기와 달리 청년들은 저성장 기조*에 직면

* 경제성장률(실질 % 연평균) : ('90년대) 7.4 → ('00년대) 4.9 → ('10년대) 3.5 → ('20~'24년) 2.0

- (산업구조 급변) 제조업 중심에서 디지털·신산업 등으로 산업 변화 가속화, 특히 AI 기술 발전은 일자리·생활 등 사회전반에 큰 영향

- 기술·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청년 역량개발 및 고급인력 양성 등이 긴요하나, 청년 석·박사 비중은 낮은 편*(3.1%)이며 역량도 저하 추세**

* 25~34세 석사 이상 비중('24) : 韓 3.1%, 美 11.4%, 英 17.4%, OECD 평균 16.1% (OECD)

** OECD 국제성인역량조사(PIAAC)에 따르면, 한국의 청년기 역량 저하('11 vs '22 비교)

2. 장기 고용지표는 회복세나, 고용의 질·체감 여건 지속 악화

- **(고용률·실업률)** 청년(15~29세) 고용·실업 장기지표*는 개선되는 추세이나, 기업의 채용규모 축소 등 청년 체감 고용여건은 전체 대비 여전히 열악**

* 청년고용률(연간) : ('00) 43.4% ('10) 40.4% ('20) 42.2% ('24) 46.1%

청년실업률(연간) : ('00) 8.1% ('10) 7.9% ('20) 9.0% ('24) 5.9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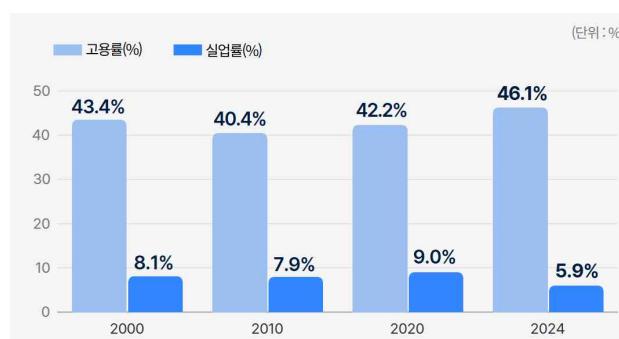
** 청년 체감실업률(연간) : ('15) 21.9% ('20) 25.1% ('24) 15.6%

전체 인구 대비 청년체감실업(연간) : ('15) 2.0배 ('20) 1.9배 ('24) 1.8배

- **(쉬는 청년 증가)** 원하는 일자리가 없어서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'쉬고 있는 청년'의 규모*도 지속 증가, 장기화시 노동시장 이탈 우려

* 쉬고 있는 청년 : ('22) 39만명 → ('23) 40.1만명 → ('24) 42.1만명

<청년 고용률 및 실업률>



* 자료 :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, 청년 15~29세

<쉬는 청년 규모 및 비중>



* 자료 :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, 청년 15~29세

- **(플랫폼·비정규 노동 증가)** 온라인 플랫폼 확산 등으로 비대면·플랫폼 근로 증가* 및 청년 비정규직 비중 증가**

* 플랫폼 종사자 규모(만명) : ('21) 66.1만명 → ('23) 88.3만명

** 20대 청년 비정규직 비율 : ('10.8) 31.1% → ('20.8) 37.7% → ('24.8) 43.1% → ('25.8) 43.9%

3. 첫 취업, 독립, 결혼 등 성인기 이행과정 지연 및 불안정

- **(사회진출 지연)** 첫 취업 소요기간 지속 증가 추세*, 학업 종료 후 취업 준비기간이 장기화되는 경향

* 첫 취업 소요기간(개월) : ('15.5) 10.0 → ('20.5) 10.0 → ('24.5) 11.5 → ('25.5) 11.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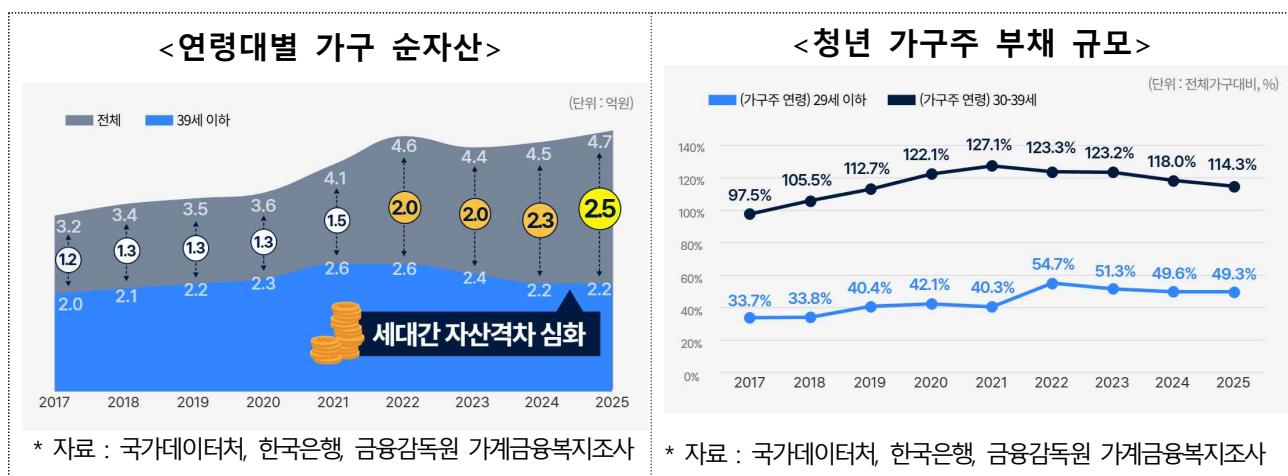
- **(독립·결혼 지연)** 주거 등 경제적 독립이 늦어지는 경향으로 절반 이상 청년이 부모와 동거* 중 ('24. 54.4%), 초혼 연령도 지속 상승*

* 초혼 연령 : ('90) 남 27.8세, 여 24.8세 → ('24) 남 33.9세, 여 31.6세

4. 자산격차 확대 및 주거 불안정 등 생활 부담 확대

- (자산격차 확대) 저성장 기조 추세下 중장년 세대 대비 소득 증가율 둔화, 자산형성 기회 제한 등으로 세대간 및 청년세대내 자산격차 심화
- (청년부채 증가) 학자금·주택마련 부채, 무리한 자산투자('영끌') 등으로 청년세대 부채 증가 추세*

* 청년개인 부채 : ('22) 1,172만원 → ('24) 1,637만원(39.7% 증가) (청년의 삶 실태조사)



- (주거 부담) 청년가구 대부분이 임차(82.6%) 거주, 월 소득의 20.3%를 주거비*(월 임대료)로 지출하는 등 他세대 대비 주거 수준 취약**

* 청년가구 평균 월세 가격 : ('21) 36.5만원 → ('22) 37.7만원 → ('23) 40.1만원 → ('24) 39.4만원

**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('24) : 일반가구 3.8% vs 청년가구 8.2% (국토부 주거실태조사)

5. 고립·온둔 증가 등 사회관계 축소 및 정신건강 문제 확대

- (사회관계 축소) 거의 집에서만 지내는 고립·온둔 청년 증가*, 사회적 교류·관계 축소

* 온둔형 청년 : ('22) 2.4% → ('24) 5.2%, 2배 이상 증가 (청년의 삶 실태조사)

- (정신건강 악화) 경쟁 심화, 경제적 불안정 등과 함께 번아웃·우울증상 증가 등 청년들의 정신건강 어려움도 확대*

* 우울증상 유병률: ('22) 6.1% → ('24) 8.8% 자살생각 경험: ('22) 2.4% → ('24) 2.9% (청년의 삶 실태조사)

III. 제1차 기본계획('21~'25) 평가 및 진단

1. 종괄 평가·진단

1. [성과] 제도적 기반 구축 및 종합적 청년정책 추진

① 범정부 청년정책 추진기반 구축

- 「청년기본법」 제정('20.2)으로 범정부 청년 종합대책 수립, 청년의 권리보장 및 국가·지자체 책무 등 법적·제도적 기틀 마련
- 청년정책조정위원회(위원장 : 국무총리)('20.9), 국조실 청년정책조정실('21.6), 9개 주요부처*의 전담과·팀('21.9) 등 정부 청년정책 추진체계 구축
 - * 기재부, 교육부, 행안부, 문체부, 복지부, 고용부, 국토부, 중기부, 금융위

② 청년 삶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적 청년정책 제도화

- 「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*('21~'25)」 수립('20.12)을 통해 일자리 중심의 청년정책에서 벗어나 청년의 삶 전반에 대한 종합적·입체적 접근 시도
 - * ▲ 일자리 ▲ 주거 ▲ 교육 ▲ 복지·문화 ▲ 참여·권리 5개 분야로 정책 체계화 및 확대
- 청년정책이 특화된 국가정책 영역으로서, 중앙부처·지자체에서 다양한 청년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양적 확대
 - * 중앙부처 청년정책 시행계획 예산(조원) : ('21) 23 ('22) 24 ('23) 25 ('24) 27 ('25) 28

2. [한계] 지원대상 제한 등으로 청년정책 체감도 낮음

① 정책 방향성·연속성 부족

- 거시적 목표·지표 등에 따른 체계적 정책 추진 보다는, 여론·이슈 등의 대응을 위한 단기적 현안 중심의 접근
 - * (예) 청년채용 확대를 위한 기업장려금 제도는 단년도 예산 한시사업으로 신설, 폐지 등 반복
- 청년들의 현장 만족도가 높은 경우에도 한시사업 등의 한계로 인해 정책 폐지·축소, 연속성·일관성 부족
 - * (예) 청년내일채움공제, 지역주도 청년일자리 사업 등

② 대표정책 부재로 인한 체감 저하

- 300여개의 다양한 청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, 이에 비해 청년들이 확실한 효과를 체감하는 대표정책은 부족
- 세부 청년 지원사업마다 지원대상, 요건 등이 상이하여 청년들은 혼란 다수 발생, 이로 인한 정책 체감도 저하

[청년들의 목소리(청년·전문가 간담회, '25.3~8월)]

- "정책 지원요건도 복잡하고, 신청도 어디서 해야할지 알기 어려워"
- "부처별로 각각 운영되고 연계가 안되어 있어 사업들이 '일회적 이벤트'에 그칠 뿐"
- "여기저기 비슷한 사업들이 많아 오히려 무슨 사업인지 알 수가 없어"

③ 제한적인 수혜 대상과 한정적인 지원

- 주로 저소득층·대학생 중심으로 청년정책이 수립·운영되어, 많은 일반 청년들을 포괄하기에는 부족
- 청년 이행기에 대한 보편적 투자보다는 저소득 복지 개념으로 접근하여 소득·자산 등 엄격한 지원요건 다수, 많은 청년들의 불만 존재

[청년들의 목소리(청년 정책집단별 FGI, '25.7월)]

- "지원사업은 많으나, 저소득 청년 중심이어서 보통 청년들은 대부분 받을 수가 없어"
- "너무 특정한 조건이 많고, 이것 때문에 안되고 저것 때문에 안되는 경우가 다수"
- "이행기의 문제는 단순히 저소득층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므로, 더 보편적 접근이 필요"

④ '표준적 삶' 중심의 지원 등 다양성 부족

- 청년들의 다양한 가치관·수요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획일적인 표준 인생경로 기준으로 청년정책 수립·운영, 청년의 선택권 부재

[청년들의 목소리(청년 정책집단별 FGI, '25.7월)]

- "청년들 사이의 다름을 인식하고 정책들을 연결해야"
- "진로를 다양하게 선택하는 것이 사회 전체적으로도 필요"

☞ 「모두의 청년정책」 청년들의 수요가 높은 핵심정책 중점 추진, 지원대상 확대 및 다양화 등으로 정책 체감도 제고 필요

※ 국민주권정부 청년정책 추진방향 수립·발표('25.9.22)

1. [일자리] 고용지표는 개선되었으나, 청년 노동시장 이탈 대응 부족

< 제1차 기본계획 일자리 분야 목표 및 실적 >

| 목표 | 실적('21~'25) |
|---|--|
| ▶ 청년 맞춤형 고용서비스 강화 (매년 일경험 청년인턴 프로그램 8만+α 지원 등) | ▶ 재학생 등 맞춤형 고용서비스 26.5만명, 일경험 12.6만명 지원 |
| ▶ 청년친화적 공정 고용문화 확립 | ▶ 능력중심 채용모델 개발(274개 채용분야 131개 개발), 공정채용제도 기업 맞춤형 컨설팅 830개사 제공 |
| ▶ 청년창업 기술중심·민간주도 전환 및 전기·주기 지원체계 강화 | ▶ 청년창업사관학교 텁스(TIPS), 창업중심대학 등을 통해 9,000여개 청년 창업기업 교육·사업화 등 성장 지원 |

① [성과] 맞춤형 고용서비스 강화 등으로 주요 고용지표 개선

- 경력·수시 채용 확대 등 구직환경 변화에 맞춰 청년의 진로탐색과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위해 맞춤형 고용서비스* 및 일경험 지원 강화

* 대학일자리+센터를 통한 고교·재학·졸업생 대상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(25.5만명), 청년도전지원사업을 통한 구직단념 청년 지원(2.5만명) 등

→ 청년고용률·실업률(15~29세) 등 주요 고용지표 개선 추세*

* 청년고용률(연간) : ('20) 42.2% → ('24) 46.1%, 청년실업률(연간) : ('20) 9.0% → ('24) 5.9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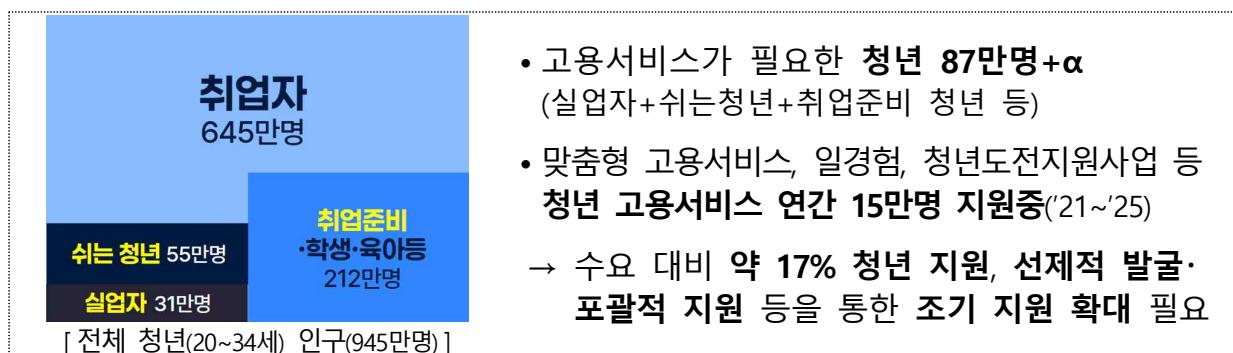
- 청년창업사관학교, 창업중심대학 등을 통한 9,000여개사 교육·사업화 지원, 청년창업펀드 6,500억원 규모 조성 및 3,700억원 투자 등 청년창업 지원

→ 전체 창업자 중 청년 창업자 비중 증가 추세*

* 청년 창업자(20~39세) 비중(%) : ('20) 33 → ('22) 37.5 → ('24) 36.9

② [한계] '쉬는 청년'의 증가와 청년 일자리의 질 악화 지속

-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'쉬고 있는 청년' 규모 증가, 청년의 취업 지연 현상 악화, 이에 대응한 선제 발굴·지원 등 조기 개입 부족



- 청년 대부분이 중소기업, 프리랜서, 시간제 근로자^{*}로 근무하는 가운데, 변화하는 고용여건에 대응한 근로환경 개선 등은 **부족**
 - * ▲ 중소기업 취업자 546만명 ▲ 시간제 근로자 200만명 ▲ 프리랜서 15만명
- 청년의 창업 도전이 감소^{*}하고, 창업 후 기업소멸율이 전연령대 중 가장 높은편^{**}으로 청년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필요
 - * '24년 창업기업수 증가율(% '20년 대비) : 10-20대(△15.2), 30대(△8.8), 40대(△22.3), 50대(△28.2)
 - ** 대표자 연령별 기업소멸율(% '23) : 10-20대(21.3), 30대(15.3), 40대(10.8), 50대(8.9)

- ☞ '쉬는 청년'의 선제적인 발굴·지원 확대 등을 통해 **청년들의 조기 사회진출 지원과 일자리의 질 제고** 중점 추진 필요
- ☞ 실패를 경험으로 다시 **재도전할 수 있는 청년 창업 여건 조성 필요**

2. [교육]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 성과, 미진학·고졸청년 지원 불균형

< 제1차 기본계획 교육 분야 목표 및 실적 >

| 목표 | 실적('21~'25)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▶ 미래사회 선도 디지털 100만 인재 양성 | ▶ K-디지털 트레이닝, 첨단산업 부트캠프, SW중심대학 등을 통해 110만명 디지털 인재 교육 |
| ▶ 교육격차 해소로 교육접근성 강화 및 출발선 공정 보장 | ▶ 국가장학금 지원단가 지속 인상 및 지원대상 확대(8구간, 100만명 → 9구간, 150만명) |
| ▶ 지자체 주도 지역혁신 맞춤형 인재 양성 | ▶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(RISE) 7개 시·도 시범운영('23~'24), 전국 17개 시·도 도입('25) |

① [성과] 청년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 및 인재양성 지원 강화

- 청년 대학등록금 마련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장학금 연간 지원 단가 지속 인상('22~'25) 및 지원 대상 확대('25)

< '21~'25년 국가장학금 연간 지원단가 (단위:만원) >

| 구분 | 기초·차상위 | 1구간 | 2구간 | 3구간 | 4구간 | 5구간 | 6구간 | 7구간 | 8구간 | 9구간 |
|--------------|---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-|-----|
| 2021년 | I 유형 | 520 | | | 390 | 368 | 368 | 120 | 67.5 | 미지원 |
| | 다자녀 | 520 | | | | | 450 | | | |
| 2025년 2학기 | I 유형 | 600 | | | 440 | | 360 | 100 | | 미지원 |
| | 다자녀 | 610 | | | 505 | | 465 | 135 | | |
| | | | 전액 | | | 전액 | | | 200 | |

- 대학·기업 등과의 협업을 통해 대학생, 구직청년, 대학원생 등 SW 등 전문분야 인재양성 확대^{*}

- * ▲ K-디지털 트레이닝 ▲ 첨단산업 부트캠프(47개 대학) ▲ SW 마에스트로(950명)
▲ AI·SW 이노베이션 아카데미(1,000명) ▲ ICT 석박사 인재 글로벌 파견교육(208명) 등

② [한계] 대학생에게 집중된 지원, 교육-일자리 연계는 여전히 부족

-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등 교육 재정지원의 대부분 대학생·대학원생에 집중되어 고졸 청년 지원 소외*
 - * 청년인구(20~34세) 인구 중 약 17.9%가 미진학 청년(학업상태 고교 졸업 또는 중퇴)이나 교육 예산 7.5조원(시행계획 기준) 중 고졸·미진학 청년에게 지원되는 예산은 약 2% 가량
- 취업청년 절반 가량은 일자리와 전공 불일치*, 기술·산업구조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응한 현장 수요 맞춤형 교육은 여전히 부족한 수준
 - * 청년층 일자리와 전공 불일치 비율(%) : ('21) 52.3 ('23) 49.5 ('25) 49.1 (통계청)

☞ 고졸 등 비제도권 청년에 대한 교육 지원 확대, AI 등 기술변화에 대응한 수요맞춤형 역량강화 지원 집중 필요

3. [주거] 주거지원 확대에도 불구하고, 청년 주거불안은 여전

< 제1차 기본계획 주거분야 목표 및 실적 >

| 목표 | 실적('21~'25) |
|--|---|
| ▶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등 청년 맞춤형 주택 균형 공급(~'27, 58만호) | ▶ 청년층 공공분양·임대 약 46만호 공급, 국립대 BTL 기숙사 등 30개교 1.9만명 지원 |
| ▶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(43.5만 가구) | ▶ 전·월세 대출, 청년월세 지원 등을 통해 청년 약 80만명 주거비 부담 완화 |
| ▶ 최저주거기준 미달 청년가구 10% 감축 | ▶ 청년가구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감소 노력 * ('21) 7.9% ('22) 8.0% ('23) 6.1% ('24) 8.2% |

① [성과]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을 통한 청년 주거 수준 개선

- 청년층에게 역세권 등 우수입지의 공공임대주택(29.5만호)과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공하는 공공분양주택(16.4만호) 등 총 46만호 공급
- 전세대출 대상·한도 확대,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및 대출 출시 등 청년 주거비 부담 경감 확대 및 내 집 마련 지원 강화
- 평균 주거면적 확대 추세* 등 청년 주거 수준 개선 측면
 - * 청년가구 1인당 주거면적(m²) : ('20) 30.9 → ('21) 30.4 → ('22) 30.4 → ('23) 32.7 → ('24) 31.1

② [한계] 주거비 부담 여전, 안전한 주거 환경에 대한 수요 증가

- 공공 주택공급 실적(46만호)이 '인허가' 기준으로 실제 착공 또는 준공되기까지는 시차 존재, 체감도 부족
- 주거비 지원 확대에도 불구하고, 청년 자가보유율 감소* 및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(RIR) 높은 수준 지속** 등 청년 주거비 부담 여전
 - * ▲ 청년가구 : ('18) 20.4% → ('24) 12.2% ▲ 일반가구 : ('18) 61.1% → ('23) 58.4%
 - ** 청년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% : ('21) 16.8 → ('22) 17.4 → ('23) 17.4 → ('24) 16.0(일반가구 15.8%)
- 청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증가*, 전세사기 피해자 중 청년·사회초년생 대다수, 청년층의 주거 품질 및 안전한 계약 등의 지원 부족
 - * 청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(%) : ('20) 7.5 → ('21) 7.9 → ('22) 8.0 → ('23) 6.1 → ('24) 8.2

☞ 전세 감소·월세 상승 추세 고려시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 확대 필요성 증가, 사회초년생인 청년의 안전한 주거계약 지원 필요

4. [복지·문화] 전방위 생활 지원 확대 성과에도 삶의 질 악화는 지속

< 제1차 기본계획 복지·문화 분야 목표 및 실적 >

| 목표 | 실적('21~'25)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▶ 청년도약계좌 신설로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 확대 | ▶ 청년도약계좌 '23.6월 출시, 누적 가입자 242만명('25.10) |
| ▶ 취약청년 긴급자금 '25년까지 8천억원 지원 | ▶ 햅살론유스 '20.1월 출시, 누적 지원건수 47만건, 누적 지원금액 1.5조원('25.8) |
| ▶ 취약청년 발굴·지원 강화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| ▶ 전담기관을 통한 고립·온둔, 가족돌봄청년 발굴 및 맞춤형 지원 시스템 구축 |
| ▶ 문화콘텐츠 분야, 역량 있는 청년의 도전과 혁신 지원 | ▶ 콘텐츠 창의인재 지원 확대, 청년예술인 예술활동 적립계좌 도입(3,012명, 3600백만원 지원) 등 |

① [성과] 취약청년 지원체계 구축 및 자산·생활 지원 확대

- 고립·온둔청년, 가족돌봄청년 등 취약청년 지원 전담기관(청년미래센터, '24.8), 발굴 및 맞춤형 지원 등 지원체계 구축
- 청년도약계좌(근로청년, 242만명 가입), 청년내일저축계좌(저소득청년, 12.4만명 가입), 장병내일준비적금(군장병, 32만명 가입) 등 청년 상황에 따른 자산형성 지원 확대
- 아침밥(천원의 아침밥), 교통(K-패스), 문화 향유(청년문화예술패스), 정신건강(마음건강 바우처) 등 청년 생활에 밀접한 부분까지 정책 지원 확대

② [한계] 청년 부채 증가 및 삶의 질·여건 악화

- 청년층의 자산 증가보다 부채 증가 규모가 큰 폭 증가* → 청년 초기 자산형성을 위한 정책상품뿐만 아니라 교육·상담 등 통합설계 필요
 - * 청년개인 부채 : ('22) 1,172만원 → ('24) 1,637만원(39.7% 증가) (청년의 삶 실태조사)
- 번아웃, 우울증상 유병률, 자살생각 경험* 등 청년 정신건강 문제가 증가하고 있으나, 이에 대한 대응·개선 부족
 - * ▲ 번아웃 경험(%) : ('22) 33.9 → ('24) 32.2 ▲ 우울증상 유병률(%) : ('22) 6.1 → ('24) 8.8
 - ▲ 자살생각 경험(%) : ('22) 2.4 → ('24) 2.9
- 스포츠·문화 활동 등 여가생활 감소 추세*이나 청년 문화향유 지원은 전체 청년의 2% 수준**, 청년층의 재충전과 성장의 기회 축소 우려
 - * 청년 정기적 스포츠활동 참여비율(%) : ('22) 46.2 → ('24) 39.5
 - 청년 정기적 문화예술활동 참여비율(%) : ('22) 40.4 → ('24) 32.2
- ** 청년문화예술패스(19세) 지원인원 16만명(2% 수준)



청년 자산형성·부채관리를 위한 상품-상담-교육 등 통합 지원 강화, 청년 정신건강 문제 예방 강화 및 재충전 기회 확대 필요

5. [참여·권리] 제도적 기반은 구축, 실질적 권한 확대 필요

< 제1차 기본계획 참여·권리 분야 목표 및 실적 >

| 목표 | 실적('21~'25)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▶ 원칙적으로 모든 정부 위원회를 청년참여위원회로 지정 | ▶ 원칙적으로 모든 정부 위원회에 청년참여 규정(청년기본법 개정 '23.9) * 예외 위원회를 제외하고 227개 위원회 지정 |
| ▶ 온·오프라인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청년정책 효과성 제고 | ▶ 온라인 청년정책 통합플랫폼('온통청년') 개편('25.2) 및 중앙·16개 시·도에 광역 청년지원센터 구축 |
| ▶ 청년친화도시 지정 등 청년 친화적 사회기반 조성 | ▶ 1차 청년친화도시 3개 도시 지정('25.2) * 서울 관악구, 부산진구, 경남 거창군 |

① [성과] 청년 참여 및 통합 전달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

- 청년참여 정부위원회*, 청년보좌역·2030자문단(24개 장관급 중앙부처) 등 청년 정책 참여 제도화 및 확대
 - * 227개 정부위원회, 위원 10% 이상 위촉 목표
- 온라인 청년정책 통합플랫폼('온통청년')을 통해 전부처·전지역의 청년 정책 정보 통합 전달 및 AI 챗봇 등을 통한 상담·자격진단 제공
- 중앙(1개) 및 시·도 광역 청년지원센터(16개)를 지정·운영하여 지역의 청년정책 확산 및 지역별 특화 사업 지원
 - * 기초 지자체 225개 등 총 242개 센터 운영중

② [한계] 참여 통로와 실질적 권한은 여전히 부족

- 정부·지자체 위원회, 청년보좌역, 2030자문단 등 정책 과정에 청년이 참여할 수 있는 공식통로는 아직 전체 청년 수의 0.1% 수준(9,000여명)
- 정책 입안 과정에서부터 청년이 참여하여 주도적으로 목소리를 투입하는 실질적인 역할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

[청년들의 목소리](청년 정책집단별 FGI, '25.7월)]

- "중앙부처에서 의견을 반영하겠다라고 하는데, 그냥 검토해 보겠다 정도"
- "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, 정책 설계부터 평가까지 지속 참여해야"

- 온라인 통합플랫폼 및 청년지원센터* 등 청년정책 통합 전달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·체감은 부족하고, 지역 격차도 존재
 - * 전국 기초 지자체 지역에 청년센터 225개소 운영중이나 63개 기초 지자체는 미설치
- 청년의 지역생활 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, 지역별 맞춤형 청년정책 확산이 중요하나 정보·추진체계 등 제도 기반 및 체계적 지원은 부족

☞ 청년의 정책 참여 통로의 양적·질적 확대 필요, 청년정책 통합 전달을 위한 지원체계 고도화 및 지역기반 확산 필요

IV. 제2차 기본계획('26~'30) 추진방향

1 수립 방향

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제1차 기본계획의 성과를 기반으로 양적 확대뿐 아니라 청년정책 전반의 질적 혁신으로 청년정책 체감도 확산

1. 보편성·청년 당사자성 확대로 청년정책 체감도 제고

- (모두의 청년정책) 저소득·취약청년만이 아닌 일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확대하여 보편적 청년정책으로 전환
- (핵심사업 집중) 청년들의 수요·만족도가 높은 핵심사업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단순화·패키지화 등을 통해 정책체감도 개선
- (청년 당사자성) 정책 과정에 청년들의 주도적인 참여를 확대하여, 청년이 실제로 필요한 정책을 스스로 발굴·제안하여 정책 반영
- (생애주기 지원) 단순히 연령에 따른 접근이 아닌 ▲사회진입 ▲노동시장 안착 ▲자립기반 마련 등 청년의 생애 과업과 정책연계 강화

2. 지역·민간으로 청년정책 기반 확산

- (지역 기반 확대) 청년과 가장 밀접한 일선 지자체와의 역할 분담 및 체계적 협업 확대를 통해 지역 청년정책 강화
- (민간과의 연계 확산) 청년생활 접점에 있는 기업(일자리창출+ESG), 민간단체 등과 적극적인 연계로 청년정책 확산 및 체감 제고

3. 청년 눈높이 소통·홍보 확대

- (소통 문턱 완화) 청년들이 부담없이 정부와 소통할 수 있도록 온라인 기반 소통 플랫폼·참여형 행사 등 확대
- (청년 눈높이 홍보) 청년들이 정책을 쉽게 찾고, 이해할 수 있도록 맞춤형 추천 홍보, 청년 친화 채널을 통한 정보 통합 제공 강화

비전

"첫걸음부터 함께, 모든 청년이 만들어가는 미래"

목표

- ❖ (기회보장) 청년들에게 일자리와 자산형성의 기회를 보장
- ❖ (기본생활 지원) 청년들의 생애주기 전반의 기본생활 지원
- ❖ (권리확대) 청년들의 실질적 정책 참여 및 당사자성 강화

분야별 중점 추진 방향

1. [일자리] 청년들이 일할 기회, 일할 지역 확대

- (1) 청년 첫 일자리와 다시 서기 지원 확대
- (2) 청년의 일자리 기회를 다양한 지역·분야로 확대
- (3) 청년 노동환경 개선 및 권익보호
- (4) 청년이 안심하고 도전하는 창업생태계 구축

2. [교육·직업훈련] 모든 청년에게 열려있는 성장의 기회

- (1) 청년 미래역량 교육 확대
- (2) 교육-일자리 연계 강화
- (3) 청년의 교육 접근성 강화와 격차 해소

3. [주거]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청년의 삶터 확산

- (1) 청년 친화 주택 공급 확대
- (2) 청년 전·월세 주거비 부담 완화
- (3) 청년 주거 안정 강화

4. [금융·복지·문화] 청년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일상 안전망 구축

- (1) 청년 초기 자산형성 지원 확대
- (2) 청년 복지 사각지대 개선
- (3) 청년 신체·마음건강 상호연계 지원 강화
- (4) 청년 문화향유 및 생활지원 확대

5. [참여·기반] 청년이 이끄는 사회, 함께 만드는 미래

- (1) 청년 주도 참여모델 확산
- (2) 청년친화적 전달체계 강화
- (3) 청년공동체 및 교류 지원 확대

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(‘26~‘30) 10대 과제

① (일자리) '쉬는 청년' 지원 - 청년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도입

- 미취업 대학졸업자, 고교졸업자·군장병 대상 개인정보제공 등의 기반으로 고용보험DB와 연결하는 **청년 일자리 첫걸음 플랫폼 구축·운영**(‘26.上~)
- 장기 미취업 위험군을 선제 발굴(약 15만명), 위험도·유형에 따라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*

* 일자리 첫걸음 대학일자리센터(10개소)를 통해 ①역량강화, ②직무전환, ③일상회복 등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

② (일자리) 지역 중소기업 청년 근속인센티브 강화

-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청년(5만명) 대상 근속 인센티브 우대 지급* 및 교육·주거 패키지 지원 추진

*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: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 청년(2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)

③ (교육·직업훈련) AI·AX 교육훈련 강화

- 5년간 200만명 이상 청년에게 AI 등 미래역량 중심으로 교육훈련 지원*
 - * ▲(대학생) AI·SW 중심대학 ▲(대학원생) AI·AX 대학원 ▲(구직청년) AI·SW 마에스트로, K-디지털 트레이닝 ▲(재직청년) 중소기업 재직자 AI 특화과정, 재직자 AID 집중과정 등
- **온라인 AI 교육센터**(‘우리의 AI 러닝’), **STEP(Smart Training Education Platform)** 플랫폼 등 온라인을 통한 청년 AI 활용 직업 역량 강화 지원

④ (주거) 청년 월세지원 대상 확대

- **무주택·저소득 청년에 대한 청년월세 지원*** 대상의 단계적 확대 추진
(현행 기준 중위소득 60%인 소득요건 완화 등 검토)
 - * 최대 월 20만원(월세), 24개월간 지원

※ 지원대상 확대 추계를 위한 연구용역 추진(‘26)

⑤ (주거) 전세계약 컨설팅 및 정보공개 확대

- **안전계약 컨설팅***, 임대차계약 체결前 접근 정보 확대** 등

* 등기사항증명서의 권리관계 분석, 임대차 계약서 문구 등 사전 검토·컨설팅

** 다가구 확정일자 정보 제공(임대인 동의 불필요), 임대인 전입세대 확인서 제시 의무화 등

⑥ (금융) 청년 미래적금 도입 및 고졸 청년 대출금리 인하

- 현행 청년도약계좌 대비 납입기간 단축(5→3년), 정부기여금 확대(3~6%→6/12%), 대상 확대 등 혜택 강화^{*}한 청년미래적금 신설
 - * ▲(지원) 일반형 정부기여금 매칭 6% / 우대형 12% ▲(일반형) 개인소득 6,000만원 이하 소득자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+ 가구 중위소득 200% 이하 청년 ▲(우대형) 중기재직청년 중 개인소득 3,600만원 이하 소득자 또는 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 + 가구 중위소득 150% 이하 청년
- 고졸 취업준비청년 등에게 대학생 학자금(생활비) 대출금리^{*}를 감안하여 핫살론 유스 금리 인하 추진
 - * 생활비 대출(한국장학재단) : 연 1.7%, 연 400만원(학기당 200만원)

⑦ (복지) 청년 마음건강 비대면 상담 확대

- 마음건강 AI 시스템 시범 설치 등^{*} 비대면 기초검진·상담 제공
 - * 익명비대면 SNS 상담앱(마들란) 확산, AI 키오스크를 청년센터, 주민센터 등에 설치 검토

⑧ (문화) 청년 문화예술가 지원 및 청년 문화예술패스 확대

- K-Art 청년창작자^{*} 지원 등을 통해 창작 활동에 집중 여건 조성
 - * 청년(만 39세 이하) 순수예술 원천창작자(26,3000명)를 대상으로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 900만원 지원, 이를 통해 창작물 산출
- 청년의 문화예술 경험 기회 지원을 위한 청년 문화예술패스의 지원 연령·지원금액(비수도권)·사용분야 확대^{*}
 - * ▲(연령) 19세, 16만명 → 19~20세, 28만명 ▲(사용분야) 공연·전시 관람 등 → 영화도서 추가
 - * (지원금액) 최대 15만원 → 수도권 15만원, 비수도권 20만원

⑨ (참여)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및 정책결정 참여 강화

-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비율 확대^{*}
 - * 청년위원 위촉비율 10% → 20% 상향 추진(26년초 청년기본법 시행령 개정)
- 청년정책조정위 전문위 설치·운영^{*} 및 활동 지원 강화
 - * 청년들이 직접 사업을 제안·수립할 수 있도록 6개 분과 60명 구성·운영

⑩ (기반) 온통청년 맞춤형 정책추천기능 구축

- AI·빅데이터를 활용하여, 청년 개인별로 지원이 가능·필요한 청년정책들을 맞춤형으로 추천해주는 기능을 온라인 통합 청년정책플랫폼('온통청년')에 구축
 - 챗봇, 검색, 상담 등 축적된 개인 이력을 활용한 상담 제공

청년 생애주기별 주요 청년정책

| | |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|
| 일자리 분야 | 재학생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대학 일자리 플러스센터 : 정부-지자체-대학이 협력하여 청년에게 진로·취업 상담과 취업 준비를 원스톱 제공(121개교) * 대학·고교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: 학년에 맞춰 진로상담, 역량강화, 취업활동계획 수립·관리 등 제공 |
| | 구직 청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구직촉진수당·구직급여 :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단계적 확대(25. 월 50만원 → '26. 월 60만원) 및 청년 대상 자발적 이직자에게도 생애 1회 구직급여 지급 추진 ▶ 청년 일경험 지원 : 민간기업, 정부부처, 공공기관, 해외 등 청년이 실무역량을 쌓을 수 있는 일경험 기회 제공 ▶ K-디지털 트레이닝 : 대학·선도기업 등과 협력, AI·반도체 등 첨단산업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훈련 과정 운영 |
| | 구직단념 청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청년 일자리 첫걸음 플랫폼 : 미취업 대학·고교졸업자, 군장병 대상 개인정보제공 등의 기반으로 고용보험DB와 연결하여 플랫폼 구축, 장기 미취업 위험군 선제 발굴 및 맞춤형 취업지원 ▶ '쉬고 있는 청년' 특화 일경험 : 사회연대경제·공공부문을 통해 쉬고 있는 청년의 점진적 적응 유도 및 경력 형성 지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비대면 등 참여 형태 유연화, 밀착형 멘토링 등 제공 ▶ 청년도전지원사업 : 구직단념청년 대상 밀착상담, 역량제고, 구직 의욕 고취 등 맞춤형 프로그램 및 참여수당(50~250만원) 지원 |
| | 재직 청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: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청년 대상(26. 5만명) 근속 인센티브 지급(인구감소지원 등 우대, 2년간 최대 720만원) ▶ 중소기업 복지 지원 : 중소기업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복지몰 등을 이용할 수 있는 복지카드 시범사업 추진 |
| | 창업 청년 |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green; padding: 2px; display: inline-block;"> 창업준비청년 </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: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누구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 선발 및 지원 ▶ 청년창업사관학교 : 아이디어 발굴, 교육, 마케팅, 사업화 자금 등 패키지 지원, AI·빅데이터 과정 신설로 신기술 창업 집중 지원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green; padding: 2px; display: inline-block;"> 청년창업기업 </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세제 지원 : AI 등 신산업 분야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소득세·법인세 감면 확대 ▶ 투자·자금 지원 : 업력 3년이내 초기기업 및 청년창업기업 대상 혁신창업펀드(~'30, 7,000억 규모 추가 조성) 및 청년 전용창업자금(기업당 최대 1억원 융자) 등 자금 지원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green; padding: 2px; display: inline-block;"> 창업 재도전 청년 </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청년 재도전 지원트랙 : 폐업경험이 있는 청년의 창업 재도전 패키지 지원(현행 재도전성공패키지 선정시 40% 청년 선발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실패원인 분석,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 및 검증, 투자유치 등 |

| | |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|
| 교육·직업 훈련 분야 | 직업계고 청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직업계고-전문대-대학 연계 : 직업계고-전문대 교육과정 연계, 산업체 현장 경험 학점 인정 등으로 학위과정 단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▲3+1 전문학사: 고교 선아수 과목 학점 인정 → 학위과정 1년 단축(2→1년) ▲2+3 마이스터 학사: 산업체 경험 학점 인정 → 학위과정 1년 단축(4→3년) ▶ 직업계고 청년 취업연계 강화 : 직업계고 청년 대상 채용 연계형 직무교육과정,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등 지원 |
| | 대학 재학생, 대학원생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국가장학금 지원 : 9구간 이하(전체 10구간) 대학생 대상 등록금 지원(지원 구간별 전액~100만원) ▶ 근로장학생 지원 : 대학생들이 일과 학업을 병행하며 장학금 지원과 직무경험 기회도 함께 지원(연간 16만명) ▶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: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(ICL)을 저리(1.7%)에 지원하고 등록금 대출 신청 대상을 모든 재학생으로 확대 및 이자면제 대상·기간 확대 ▶ AI·SW 중심대학 : AI 필수 교과목화, AI 학과 개설 등 대학 교육체계를 AI·SW 중심으로 혁신하여 실무형 교육 지원 |
| | 재직 청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(희망사다리Ⅱ) : 고졸 청년이 취업 후에도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대학장학금 지원 ▶ 재직자 AID 집중과정 : 성인 재직자 대상 'AI+X' 교육 제공 ▶ 중소기업 재직자 AI 특화과정 : 중기 재직자의 AI 리터러시 제고 교육 및 AI 전문인력 양성 지원 |

| | | |
|-------|------------|--|
| 주거 분야 | 무주택 청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공공임대주택 공급 : 청년층 선호 입지에 공공임대 공급 지속 확대(건설·매입·전세임대 등) 및 품질·서비스 향상 ▶ 청년 전세자금 대출 :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을 통해 무주택 청년 전세자금 저리대출 지원(연 2.20~3.30%, 최대 1.5억원) ▶ 청년 월세 지원 : 무주택·저소득 청년 대상 임차료 2년간 월 최대 20만원 지원, 계속사업 전환 및 지원대상 확대 추진 ▶ 대학생 주거안정장학금 : 기초·차상위 대학생 대상 주거 관련 (임차료, 관리비 등) 비용 월 최대 20만원 지원(연간 240만원) |
| | 내집마련 희망 청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공공분양주택 공급 : 청년층이 내 집 마련이 가능하도록 청년 특별·우선공급 지속 운영, 부담 가능한 수준의 공공분양 주택 공급 ▶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·대출 : 우대금리·비과세 혜택의 청년 전용 청약통장, 이를 통해 청약 당첨시 저리의 청년주택드림 대출 지원 (연 2.40~4.15%, 최대 40년, 미혼 3억원·신혼 4억원 한도) |

| | | |
|----------|--------|--|
| 금융 분야 | 근로청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청년미래적금 : 월 납입금(최대 50만원)에 대해 정부가 일정비율 금액(6%)을 매칭*하여 청년들의 초기 자산형성 지원(3년 만기), 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**에게는 정부기여금 우대(12%) * 개인소득 6,000만원 이하 소득자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+ 가구 중위소득 200% 이하 청년 ** 개인소득 3,6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 또는 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 + 가구 중위소득 150% 이하 청년 ※ 일반형 소득요건 충족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는 우대형 분류 |
| | 저소득 청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청년내일자족계좌 :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월 납입금(10~50만원)에 정부지원금 매칭(소득별 10/30만원 정액) 지원(3년 만기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(대상) 월 근로·사업 소득 50만원 초과~250만원 이하(기초·차상위 청년은 월10만원 이상 소득) ▶ 햇살론 유스 : 연소득 3,500만원 이하 대학생, 미취업청년, 사회초년생 등에게 저리(5%) 자금 대출로 자금애로 해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고졸 취업준비 청년 등에게 대학생 학자금(생활비) 대출 금리를 감안하여 금리 인하 추진 |
| | 군 장병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장병내일준비적금 : 병사 대상 월 납입금(최대 55만원)에 대해 정부기여금 100% 매칭 및 비과세 혜택 지원 ▶ 장기간부 도약적금 : 초급 군간부 장기복무자 대상 월 납입금(최대 30만원)에 대해 정부기여금 100% 매칭(3년 만기) |

| | |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|
| 복지 분야 | 고립·온둔청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전담지원체계 구축 : 위기청년 전담 지원기관(청년미래센터) 단계적 전국 확대를 통해 조기 발굴 및 밀착 사례관리 강화 ▶ 발굴·맞춤형 일상회복 지원 : 공공데이터를 활용을 통한 조기발굴, 초기 맞춤형 상담을 통한 일상회복 프로그램 및 정책 연계 지원 |
| | 가족돌봄청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자기돌봄비 지원 : 본인 성장에 초점을 둔 자기돌봄 계획 수립 및 자기돌봄비 지급(연 200만원) 단계적 확대 ▶ 가족돌봄 특화지원 : 사회서비스 본인부담비율 할인, 자활 사업 참가 유예, 돌봄가족 지원 확대 등 |
| | 자립준비청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자립수당 및 자립정착금 지원 : 자립수당(50만원, 5년간), 자립정착금(1,000만원 이상) 등 경제적 자립 지원 ▶ 주거·진로 등 자립 지원 :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, 디지털 분야 진로 지원, 재무관리 교육 등 맞춤형 자립 지원 |
| | 마음건강관리 필요 청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점검·관리 강화 : 청년 정신건강검진 항목 확대 및 검사주기 단축 → 검진 결과 위험군 대상 의료기관 첫 진료비 지원 및 심리상담 바우처 지원 연계 ▶ 상담 접근성 제고 : 청년 마음건강 AI 시스템 등 쉽게 상담 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 완화 |

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| 신체건강 취약 청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취약청년 신체건강지원 : 개인운동, 식단관리, 자세·체형 교정 등 맞춤형 운동서비스 제공으로 청년 건강증진 지원 ▶ 청년 제공인력 일경험 지원 :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을 통한 청년 제공인력(체육학 전공) 채용으로 일경험 및 경력 형성 지원 |
| 문화 분야 | 일반청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청년문화예술패스 : 19~20세 청년이 문화예술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공연·전시·영화에 사용할 수 있는 패스 지원(최대 20만원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▲ 연령 : ('25) 19세, 16만명 → ('26) 19~20세, 28만명 ▲ 사용분야: ('25) 공연·전시 관람 등 → ('26) 영화 추가 → ('26.下) 도서 추가 ▲ 지원금액 : ('25) 최대 15만원 → ('26) 비수도권 20만원 |
| | 청년 문화예술가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K-Art 청년창작자 지원 : 청년(39세 이하) 순수예술 원천창작자를 대상으로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 900만원 지원 ▶ 청년예술인 예술활동 적립계좌 :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청년 예술인(만 18~39세) 대상 2년간 월 적립액(최대 10만원)에 대해 정부기여금(100%) 매칭 지원 |
| 참여 ·기반 분야 | 정책 참여 희망 청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미래대화 1·2·3 : 국무총리와 함께 일자리, 주거, 교육, 문화, 참여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미래세대와 소통하는 사회적 대화 플랫폼 운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▲ 1차 청년 참여('25.7.24, 서울) ▲ 2차 청년문화예술('25.9.10, 한예종) ▲ 3차 청년일자리('25.10.22, 대구) ▲ 4차 청년금융('25.11.28, 대전) - 참여 청년을 포함한 「미래대화 1·2·3 청년자문단」 구성으로 정기적으로 폭넓은 의견수렴 추진 ▶ 청년정책조정위 전문위 : 청년들이 직접 청년지원사업을 제안·수립하는 6개 분과 전문위원회(60명 이내) 설치·운영 ▶ 청년위촉 정부위원회 :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 전반에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해 정부위원회에 청년 위촉을 지속 확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'25년 기준 청년위촉 정부위원회 227개에 청년위원 위촉 비율 10% 이상 |
| | 청년정책이 궁금한 청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온라인 통합 청년정책플랫폼('온통청년') : 부처별·지역별 청년정책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, AI·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맞춤형 정책추천, 통합상담시스템 제공 ▶ 지역 청년지원센터 : 광역(16개), 기초(225개)에 청년지원 센터 운영으로 지역청년의 청년정책 접근성 제고, 청년 정책 사업의 지역 허브기관 역할 강화 |

3

제1차 기본계획 대비 주요 변화

- **(전부처 참여)** 제1차 대학생·취약청년 중심으로 일부 부처에서 추진
→ 제2차 '모두의 청년정책' 취지에 맞춰 '전부처 참여'로 확대
- **(지원대상 확대)** 제1차 일경험, 주택분양 등 지원대상 청년 소수
→ 제2차 일자리, 주거, 자산 핵심정책 중심으로 일반청년 지원 확대
- **(소통·참여 확대)** 제1차 청년정책 중심으로 일부 청년들이 참여하는 소통
→ 제2차 국가정책 전반에 대한 온오프라인 전방위 참여 기회 확대

< 중점추진방향 주요 변화 >

| 분야 | 1차 기본계획('21~'25) | 2차 기본계획('26~'30) |
|------|---|--|
| 일자리 | 일경험 제공 확대 (8만+a 지원 등) + 맞춤형 고용서비스 강화 | 첫 일자리와 재도전 기회 확대, 조기 취업 지원 |
| 창업 | 일반 기술창업 지원 중심 (단계별 패키지 지원) | 모두의 창업 지원 + 문화·콘텐츠, 미디어, 건설, 환경 등 분야별 특화 창업 지원 |
| 교육 | 일반 대학생 중심 지원 (장학금 확대 등) | 고졸 청년 + 전문인력* 지원 확대 * AI + 건설, 에너지, 바이오, 해운, 문화 등 |
| 주거 | 공공분양 등 주택마련 기회 확대 (~'27년, 34만호) | 주택마련 기회 확대 지속 +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전한 주거 지원 |
| 자산형성 | 청년 자산형성 지원 (희망저축계좌 → 청년도약계좌) | 청년 자산형성 지원 확대 및 연계 (청년미래적금 도입 및 정책간 연계 강화) |
| 복지 | 고립은둔 청년 등 취약청년 발굴, 지원강화 | 가정 밖 청년 등 청년복지 사각지대 추가 발굴·지원 |
| 국제교류 | 청년 해외진출 지원 | 진출지원 + 쌍방향 교류 |
| 참여 | 청년이 만드는 청년정책 (for 청년 → with 청년) | 국가정책 전반에 대한 참여 확대 + 온·오프라인 전방위 참여기회 보장 |
| 추진기반 | 일부 중앙부처 중심 추진 (9개 전담부처 등 32개 부처청) | 전 부처* 참여 (48개 부처청) + 지자체·민간 연계 * 부처별 특화 창업지원 및 전문인재 양성 |

1

일자리 분야

청년의 일할 기회, 일할 지역 확대

- ◆ 선제적 일자리 지원으로 청년 조기 사회진출 유도 및 다시 서기 지원 확대
- ◆ 「교육-일자리-정착」 패키지 지원으로 청년들의 지역 유입·정착 확대
- ◆ 노동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청년들의 노동권익 및 노동환경 개선

(1) 청년 '첫 일자리'와 '다시 서기' 지원 확대

① 청년 조기 사회진출 지원

① 민·관 협업을 통한 청년 신규 채용 확대

- (일자리 창출 기업 지원) **신규** 민·관 협의체(^{가칭} 청년 일자리 첫걸음 지원 협의체) 정례 운영, 기업 채용동향 및 애로사항, 정부 인센티브 지원 등 검토·점검
 - **신규** 청년 신규 채용 확대 기업에 대한 재정*, 세제**, 포상 등 인센티브 발굴 추진, 전방위 지원 확대로 기업의 청년 일자리 창출 유도
 - *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현재 우선지원 대상기업 지원중, 지방 산단 중견기업 추가 지원 검토('26~) 등
 - ** 청년 일자리 강소기업, 일자리 유통기업 등 유사제도 통합 연구용역(노동부, ~'26) 및 법적 근거 마련 후 세제지원 방안 검토 예정 + 청년장기고용 유인 강화를 위해 공제액 구조를 고용기간별 점증구조로 개편('26~)
- (청년채용 확대) **신규** 국가 연구개발 분야 청년(19~34세) 채용 확대를 위해 국비지원 기업 R&D 수행시 청년고용 우대 검토

②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연계 추진

- **신규** 청년들의 노동시장 조기진입을 위해 졸업예정자, 졸업 후 일정기간 내 청년에게 직업교육·일경험·취업 연계 등 선제적인 패키지 지원*
 - * (예)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 후 일정기간(3~6개월) 내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진로상담 제공 → ▲직업교육 ▲일경험 ▲취·창업지원을 청년이 선택하여 지원
 - ※ 일자리 첫걸음 플랫폼, 국민취업지원제도, 청년도전지원사업, 재학생 고용서비스, 창업 지원, 일경험 지원사업, 지자체 자체 지원사업 등 현행 청년 일자리·교육 지원사업 연계 강화

→ 국조실 주관 관계부처 TF 설치·운영을 통해 취업·창업·교육 등 지원사업 연계·패키지화, 청년의 선택권 확대 등 세부방안 마련·추진(~'27)

【 (참고) EU·프랑스 청년 일자리 조기개입 지원 】

- ▶ **EU 청년보장제**(Youth Guarantee, '13.4)
 - EU 이사회는 코로나19 이후 악화된 청년 고용상황 극복을 위해 청년보장제 강화 권고
 - **졸업 4개월 이내**의 15~29세 취약계층, 니트청년을 대상으로 **고용·교육·직업훈련** 등 포괄적 청년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조기 제공
 - **청년 니트비율 감소**(13. 15.2% → '19. 11.7%), **청년 실업률 감소**(13. 25% → '19. 15.6%) 등 기여
- ▶ **프랑스 청년참여계약제도**(Le Contrat d'Engagement Jeune, '22.3)
 - 코로나19 이후 취약 청년의 노동시장 조기진입을 위해 **16~25세 청년 니트 및 불안정 고용상태 청년**을 대상으로 **수당*** 및 **취업지원 프로그램**** 제공
 - * 소득구간별 차등, 월 224~561유로(약 35~90만원) 6~12개월 지원
 - ** 15~20시간 동안 진행되는 개별·집단 프로그램을 통해 정기적 취업활동 기회 제공

③ 청년 맞춤형 고용서비스 지원 강화

- **(AI 기반 취업지원)** **신규** AI가 개인의 취업 강·약점과 성공확률 분석, 취업확률을 높일 훈련도 추천하는 AI 1:1 취업지원 제공('25.9~)
- **(경력설계 지원)** **신규** 규모·업종별 임금분포, 근속기간 정보 등과 연계, 청년들에게 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일자리 선택 및 경력 설계지원
- **(국가기술자격 개편)** **개선**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자격을 점진적으로 다양화*하고, 응시료 지원(50% 감면) 종목 확대** 추진
 - * (예) 경력기간 합리화, 직업훈련을 통한 응시자격 인정 확대 등 검토
 - ** (현행) 한국산업인력공단 소관 488개 → (확대) 대한상공회의소 등 10개 기관 소관 540개

② 쉼 → 회복 → 재진입의 청년 '다시 서기' 지원 강화

① '쉬는 청년' 맞춤형 지원

- **(청년 일자리 첫걸음 플랫폼)** **신규** 미취업 대학졸업자, 고교졸업자·군장병 대상 개인정보제공 동의 기반으로 고용보험DB와 연결하는 플랫폼 구축·운영(26.上~)
- **신규** DB정보를 활용하여(실업·훈련 이력 등) 장기 미취업 위험군을 선제 발굴(약 15만명), 위험도·유형에 따라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*
 - * 일자리 첫걸음 대학일자리+센터(10개소)를 통해 ①역량강화, ②직무전환, ③일상회복 등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

- ('쉬는 청년' 특화 일경험) **신규** 사회연대경제·공공부문을 통한 '쉬고 있는 청년' 특화 일경험 활성화로 점진적 사회 적응 유도 및 경력 형성 지원
 - * 쉬고 있는 청년 특성을 고려한 비대면 등 참여 형태 유연화, 밀착형 멘토링 등 제고
- (**구직단념청년 지원**) 구직단념청년 등에게 밀착상담, 역량제고, 구직의욕 고취 등 맞춤형 프로그램과 참여수당을 제공하여 회복·노동시장 진입 지원
 - * 청년도전지원사업 : 프로그램에 따라 50~250만원 참여수당 지급('26. 1.3만명)

② 안정적 구직활동 지원

- (**구직촉진수당 확대**) **개선** 국민취업지원제도 중 구직촉진수당*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구직기간 중 경제적 부담 완화
 - * 기준증위소득 120% 이하이면서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청년에게 구직촉진수당(구직활동지원금) 확대(6개월간) : ('25) 월 50만원 → ('26) 월 60만원
- (**구직급여 확대**) **신규** 청년을 대상으로 자발적 이직자에게도 생애 1회 구직급여 지급을 추진하여 청년들의 재도전 여건 마련

③ 청년 쉽·회복 지원 강화

- (**청년 갭이어 지원**) **신규** 청년들이 학업·일을 잠시 쉬고 회복, 진로 탐색 등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갭이어(Gap-year) 지원방안* 중장기 검토
 - * (예) 지역청년센터 등에서 진로탐색 워크숍, 봉사·체험 등 멘토·지원
 - ※ 연구용역('26)을 통해 제도개선 및 지원방안 마련 및 추진
- (**재도전 지원**) **신규** 취업 등 실패 이후 경험 활용, 재도전 할 수 있도록 지역청년지원센터와 연계하여, 상담·분석 및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*
 - * (예) 청년의 실패 경험수기 등을 통해 선발, 상담·분석 등을 통해 재도전 계획 수립 지원 및 지원사업 연계 등

③ 노동시장 연착륙을 위한 역량 제고 지원

① 청년 초기 진로탐색 지원 강화

- (**대학 진로지도 강화**) 대학의 진로지도 지원을 위해 「학생 맞춤형 진로 지원 가이드라인*」 마련 및 「대학 진로교육 현황조사」 전면 개편
 - * 대학이 진로지도 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대학 유형 및 학과별 여건을 반영한 기준 제시

- **(군복무 청년 진로지원)** 군복무 기간이 청년들의 진로탐색 및 역량개발 기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진로탐색, 자기개발 등 지원 강화
 - 군복무 청년 대상 취업 상담·매칭 및 창업인식개선 교육 등 진로교육 강화, 병역진로설계 서비스 및 취·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
 - **신규** 전체 장병을 대상으로 AI 온라인 교육 확대(26.50만명),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 지원 확대(26.4만명) 및 전자책 구독 지원 신설*
 - * 전체 병사 대상 전자책 구매액(80%), 연간 64,000원 한도 지원

② 일경험(청년인턴) 기회 확대 및 내실화

- **(민간기업 청년인턴)** **신규** 민·관협업을 통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채용·운영 중인 인턴·일경험·훈련·교육 등 참여 기회 지속 확대(“일자리 첫걸음 캠페인”)

【 일자리 첫걸음 캠페인 추진방식 】

- ▶ (기업) 대·중견기업 및 스타트업 참여, 신입 역량강화를 위한 **인턴·일경험·훈련을 사회공헌 차원**에서 확대 실시(방식 자율)
 - * (예) [현대차: 소프티어 부트캠프] IT·디자인 교육(8주) → 현대·기아 IT직무 채용기회 부여 [LG전자: DX School] 빅데이터·AI 교육(6개월) → 우수 수료생 서류전형 가점 부여
- ▶ (정부) 참여기업 **홍보** 및 **동반성장지수** 가점 등 인센티브 부여, 인턴 경험 **취업 포트폴리오化** 지원 및 취업지원 연계

- ICT, 문화 등 부처별 전문분야 인턴십 등 일경험 기회 지속 확대*
 - * ▲ ICT 학점연계 프로젝트 인턴십 ▲ 무대기술 인턴십 ▲ 공예청년 인턴십 등
- **(정부부처 청년인턴)** 공정하고 효율적인 선발* 체계 확립, 단순 일경험을 넘어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‘정책참여형 일경험 제도’로 발전
 - * 청년인재DB에 전부처 통합 채용접수창구 마련, 전공·자격증 등 우대요건을 최소화한 열린채용 실시
- 주도적 직무경험 및 정책참여 기회*를 확대하여 청년의 역량을 강화하고 향후 진로 설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확대
 - * 부처간 연계 협업 프로그램 활성화, 정책연구모임 및 정책아이디어 발표회 등
- **(공공기관 청년인턴)** 열린 채용*을 통해 청년의 학력, 출신 등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직무체험 기회 제공
 - *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 적용 권고,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통해 전면 도입 여부 검토(26.上)

- (해외 청년인턴) 국제기구, 해외봉사단, 재외공관 파견 등을 통한 청년들의 해외 일경험 기회 지속 제공, **신규 지방청년 대상 지원 확대***
 - * 지방청년인재 재외공관 파견 등

③ 기업맞춤형 직업훈련 확대

- (첨단산업 실무인재 양성) **신규 기업 수요가 확대되는 AI 분야 특화 직업훈련 과정 확대***
 - * ①기업·대학·훈련기관에서 AI·AX 전문인력 양성 훈련(1만명, '26) → ②훈련 종료 후 조속한 취업 지원(다양한 산업·직무의 AX 인재 채용박람회 추진)

【 (예) 청년 선호 직업훈련 과정 】

- ▶ [SKALA] SK AX의 현직 전문가가 직접 설계한 AI, 클라우드 관련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청년 대상의 현장 실무인재 양성 교육 제공('25. 180명)
- ▶ [SSAFY] 삼성전자가 청년 SW·AI 인재 양성을 위해 운영하는 과정으로 1년 간 기본 SW 이론부터 AI 활용 실무 프로젝트까지 집중 훈련 진행('25. 2,000명)
- ▶ [서울대 핀테크 과정] 빅데이터, AI 등 기술을 금융에 접목하는 핀테크 분야 인력을 양성하는 과정으로, 서울대 교수진이 직접 훈련 진행('25. 135명)

- (AI 분야 스타트업 연계) AI 분야 실무인재 양성 교육과정을 운영하고, 혁신 벤처·스타트업 기업과 취업 연계(이어드림스쿨, '26~'30. 1,000명 이상)
- (공동훈련센터 확대) 대기업 등 공동훈련센터에서 협약중소기업의 수요를 반영하여 훈련생 모집, 기업 맞춤형 훈련 실시 및 채용 지원*
 - * 연간 1.3만명 채용연계형 훈련 지원(~'30)

(2) 청년의 일자리 기회를 다양한 지역·분야로 확대

① 지역 중소기업 유입 및 근속 지원

- (지역 중기 근속 지원) **개선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청년(5만명) 대상 근속 인센티브 지급***(인구감소지역 등 우대, 2년간 최대 720만원)
 - *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: (현행) 빈일자리 업종(10개) 중소기업 취업 청년(2년간 480만원) → (확대)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 청년(2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)
- (지역 중기 취업 연계) **‘참 괜찮은 강소기업’(1만개사) 선정, 청년에게 기업정보 제공 및 범정부 취업 연계로 청년층 유입 촉진(~'30. 1만명)**
 - * 일자리, R&D, 해외진출 등 분야에서 우수성·성장가능성을 인정받은 중소기업으로, 노동부 ‘강소기업’과 중기부 ‘참 괜찮은 중소기업’ 사업을 통합 운영('25)

- 지역내 기업인력애로센터(17개소, 중진공 지역본부) - 전국 고용센터(100여개소) 협업을 통해 구인기업을 발굴하고 청년에게 직무교육 및 취업 매칭

② 지역 「인재양성-일자리-정착」 패키지 지원 강화

- **(지역 맞춤형 지원)** 신규 지자체 협업을 통해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하여 지역에서 청년의 교육, 일자리, 정착 등 지원 강화
 - ※ 청년 일자리 지원 연계 관련 관계부처 TF를 통해 지역 일자리-정착지원 방안, 지자체 협업방안 등을 함께 검토·논의
- **(지역 인재양성)**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(RISE)*를 통해 지역대학이 지자체·산업계·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청년 인재양성 강화**
 - * RISE(Regional Innovation System & Education) : 지자체-대학의 협력적 동반관계 구축을 통해 지역 혁신·발전을 이끄는 체계
 - ** 충남형 계약학과 : 대학-기업 공동 학생 선발 및 채용 약정 → (1년차) 기초 학습·실무 교육 이수 → (2~3년차) 기업 근무·직업능력 고도화(26. 16개 대학 44개 학과 운영 예정)
- **(캠퍼스 혁신파크)** 대학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도첨산단을 조성하고 기업공간 제공, 연계 프로그램 지원 등 청년들의 창업·성장기반 마련*
 - * 9개 대학 선정, 순차적인 준공을 통해 지역 산학연 협력 생태계 구축

③ 청년의 준비된 영농진입 및 정착 지원

- **(농지·주거 지원)** 청년농 우선으로 맞춤형 농지공급을 확대*하고 농촌보금자리** 지원으로 안정적 농업기반 구축 및 농촌 정착 촉진
 - * ▲ 공공임대용 농지: ('25) 2,500㏊ → ('26) 4,200㏊ ▲ 임대한도 상향: (기존) 3~6㏊ → (개선) 4~7㏊
 - ▲ 선임대 후매도 지원물량: ('25) 50㏊ → ('26) 200㏊
 - ** 단독주택형 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고 공동보육시설 및 문화·여가 커뮤니티 시설 등을 함께 조성하여 생활여건 개선('25. 27개소 → '26. 32개소)
- **(정예농업인재 양성)** 창농이 준비된 청년을 중심으로 영농정착지원금* 지급 및 예비농 멘토링·실습·자금 등 창농 준비지원 도입 검토
 - * ▲ 영농정착지원금 : 3년간 월 90~110만원 ▲ 우수후계농 육성자금 대출 : 최대 2억원 연 1.5%
- **(농업인 퇴직연금)** 신규 청년농이 은퇴후에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기 적립 후 연금형태로 돌려받는 '농업인 퇴직연금형 저축' 도입 검토

④ 청년의 어업 도전 지원

- **(어촌정착 지원)** 청년바다마을* 확대('25. 3개소 → '26. 6개소)를 통해 청년 귀어 주택단지와 일자리 연계 지원, 어촌정착자금 지원 확대**
 - * 주거공간 조성, 공동시설 설치, 어촌계 참여 등 지역사회 연계 등 청년들에게 어촌 일자리와 정착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마을
 - ** 최대 월 110만원 지원(~'30, 2,100명)
- **(어업 진입 지원)** 어선어업을 희망하는 청년 대상 어선임차료 지원 및 어업교육·멘토링 등 지원 확대
 - 스마트 양식기술을 적용한 청년 창업임대형 양식단지*를 조성하여 청년 어업인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
 - * 어촌에 양식장 및 기반시설을 조성해 청년 귀어인들이 충분한 교육과 실습 과정을 거쳐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('25. 3개소)

(3) 청년 노동환경 개선 및 권익 보호

① 청년 노동권의 보호

- **(AI 노동법 상담)** **신규** 청년에게 24시간 맞춤형 AI 노동법 상담*을 제공하고 상담 기반 신고 사건 접수 등 지원
 - * 청년들이 알바 구직시 활용하는 당근마켓에도 탑재, 구인공고 관련 즉시 상담 가능
- **(노동법 준수 자율점검)** **신규**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등 소규모 사업장에서 AI 기반으로 노동법 준수 여부를 사전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('26.9)
- **(안전한 일터 조성)** 청년들이 중소기업에서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노후·위험공정 개선, 산재예방 시설·장비 지원 등 일터 안전 강화

② 플랫폼·프리랜서 노동자 권리보호

- **(권익 보호)** **신규** 청년 비중이 높은 플랫폼·프리랜서 노동자 보호를 위해 「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」 제정, 공정 계약 및 노동자 추정 제도 등 마련
 - * (주요 내용) 공정한 계약 체결,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, 보수 적시·전액 지급 등
- **(실태 조사)** **신규** 개념·범위 등에 대한 문헌·사례 비교 조사 및 기준별 장·단점 연구 선행, 국가데이터처의 국가승인통계 편입 추진('26~)

- (경력 관리) **신규** 직무능력은행제도* 활성화 등 프리랜서·단기근로·인턴 경험 등을 청년들이 직무 경험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경력 인증 지원
 - *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근로시, 습득한 직무능력(근무지·근무기간)에 대한 인정서 발급
 - '청년 일경험(인턴) 포털(노동부)'을 통한 중앙부처, 공공기관, 민간기업(미래내일 일경험 등) 일경험 수료증 발급 검토

③ 청년 선호 기업복지 확대 지원

- (중소기업 복지 지원) **신규** 중소기업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복지카드 시범사업* 등 추진 검토
 - * (예) 청년일자리강소기업, 비수도권 기업 등 선정 시 우대, 기업근로자 부담에 정부 매칭 지원
- (일·가정 양립 지원) 육아휴직 등 대체인력·업무분담 지원, 유연근무 활성화 지원, 가족친화 인증기업 확대 등 일·가정 양립 기업환경 조성 지원

④ 중소기업·산단 근무환경 개선

- (근로환경 개선) **신규** 근무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근무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복지시설 바우처* 검토
 - * 휴게실, 북카페, 소규모 피트니스 시설 등 청년친화 휴게공간 및 편의시설 등
 - **신규** 청년이 일하고 싶은 중소기업 만들기 캠페인*(26.下~) 실시 및 산단 노동여건 개선 지원 사업 등과 홍보 연계
 - * 청결한 화장실, 혹서기·혹한기 냉난방 등 '기본적인 근로환경'을 갖추도록 홍보
- (청년친화산단) 문화선도산단(25.3개소) 랜드마크 및 문화 컨텐츠(공예 오픈 스튜디오 등) 개발 등 청년 유입을 위한 구조 고도화, 재생사업 지원

(4) 청년이 안심하고 도전하는 창업생태계 구축

① 청년 창업 도전 지원 강화

- (신기술 창업지원 강화) **개선** 청년창업사관학교, 창업중심대학, 창업탐색교 육 등을 통해 AI·바이오헬스 등 신기술 혁신 청년창업가 육성 강화

【 신기술 청년 창업지원 주요사업 】

- ▶ (청년창업사관학교) 전국 청년창업사관학교(18개소) 内 AI·빅데이터 등 과정 신설, 글로벌 심화과정 확대 등 혁신 청년 창업가 양성('26~'30, 1,500명)
- ▶ (딥테크 창업중심대학) 우수 기술역량 보유 대학을 중심으로 '딥테크 창업중심대학' 지정, 대학의 기술인프라를 연계하여 딥테크 스타트업 맞춤형 지원
- ▶ (창업탐색교육) 이공계 석·박사생이 실험실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창업 가능성을 탐색하는 창업탐색교육 확대 지원('26~'30, 1,200팀)
- ▶ (K-디지털 그랜드 챔피언십) 민·관협력을 통해 민간·공공 디지털 경진대회 우승 스타트업이 참여하는 왕중왕전 개최, 우수기업 대상 투자·공간·네트워킹 등 후속지원

- (모두의 창업 프로젝트) **신규**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누구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'모두의 창업 프로젝트' 추진

② 부처별 전문분야 특화 창업 지원 강화

- (문화·콘텐츠) 전통문화 창업 사업화·자금·마케팅 등 지원(~'30, 100개 이상), 게임 분야 예비창업자 및 스타트업 공모전 및 멘토링 전시회 지원(~'30, 110개 이상)
- (미디어) '1인 미디어 콤플렉스*'의 창업·제작공간 제공 및 일자리 허브 역할을 강화하고 미디어 지망 청년의 성장 기반 확산
* 1인 미디어 창작자 및 스타트업에게 창작 인프라와 창업·사업화 지원(서울 마곡, 40개소 입주)
- (기후·환경) 기후·환경분야 우수 청년창업 아이디어 발굴(~'30, 125개) 및 에코 스타트업 사업화 자금지원, 역량강화 멘토링(~'30, 200개사) 등 맞춤형 창업 지원
- (건설) 스마트건설 관련 창업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사무공간, 사업화 및 투자유치 컨설팅 등 지원(~'26~'30, 55개사 내외)
- (특화창업) 전 부처가 소관 분야 청년창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 발굴 및 개선

③ 청년창업기업 투자·판로지원 확대

- (자금 지원) 신용 및 담보력이 부족한 청년 창업가를 대상으로 인건비, 시설자금 등 정책 자금* 및 보증 지원**
* 청년전용창업자금 : 기업당 최대 1억원 융자 지원
** 청년창업기업보증 : 보증료 0.3% 감면, 보증비율 95~100%(보증금액 및 창업연한별 차등)

- **(투자 지원)** 혁신창업펀드*(~'30, 7,000억 규모 추가 조성), 대학창업 펀드(~'30, 200억 출자) 등 청년창업기업 투자 지속 확대, 성장 지원
 - * 업력 3년 이내 초기기업 및 청년창업기업 대상
- **(판로 지원)** 신규 청년 창업기업 대상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* 신설 추진 등 청년 창업기업의 판로 확대 지원
 - * 현재 창업기업 제품에 대한 공공기관 우선구매(8%) 운영중, 창업기업제품 내 청년 창업기업 대상 비율 할당 검토

④ 청년창업기업 법률·세제 등 지원 확대

- **(원스톱 지원센터)** 신규 초기·청년 등 창업기업이 법률·규제 등 애로사항을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온·오프라인으로 스타트업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센터 운영
- **(세제지원 확대 등)** 신규 AI 등 신산업 분야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·법인세 감면* 확대('27), 일자리창출 청년창업기업 세무 조사 특례기준 완화
 - * (현행 감면율) 수도권(과밀억제권역) 50%, 수도권(성장관리권역·자연보전권역) 및 비수도권 100%
- **(데이터·AI 바우처)** 청년기업 대상으로 데이터 구매, AI 솔루션 구매 등 바우처 우대 지원하여 혁신서비스 개발 지원

⑤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청년창업 안전망 구축

- **(청년 재도전 전용트랙)** 신규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폐업 경험 있는 청년의 재도전을 지원*하는 전용트랙 신설**
 - * 실패원인 분석,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 및 검증, 투자유치, 사업화 자금(최대 1억원) 등 패키지 지원
 - ** 현행 재도전성공패키지 사업지원 대상 선정시 40%를 청년으로 선정
- **(예비창업지원 확대)** 신규 예비창업 지원사업*은 1번만 지원이 가능하나, 폐업 후 재창업을 준비하는 청년 예비창업자**에게는 한번 더 지원 허용
 - * 창업사업화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(최대 1억원), 창업교육 및 멘토링 등 지원
 - ** 기존의 예비창업 지원사업에서 '최우수' 평가를 받은 청년창업자 중 폐업일로부터 3년이상 경과한 경우에 한해 폐업 후에도 신청 가능
- **(중장년 공동창업)** 신규 중장년의 지식·경험을 바탕으로 청년들의 창업 성공률 제고를 위한 청년·중장년 공동창업 지원 확대*('25~)
 - * (현행) 공동대표 모두가 청년인 경우만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 가능
→ (개선) 창업 관련 경력 보유 중장년과 청년이 공동대표인 경우도 지원 가능

모든 청년에게 열려있는 성장 기회

- ◆ 5년간 200만명 이상 청년에게 AI 등 실무형 미래역량 교육 지원 및 분야별 전문인재 14만명 양성
- ◆ 고졸 청년 등 제도권 밖 청년에게 교육 기회 확대

(1) 청년 미래역량 교육 확대

① AI·SW 등 미래역량 교육 확대

※ 청년 AI 한글화 프로젝트 등 추진

- **(역량 개발)** **개선** AI 등 미래역량 중심으로 교육훈련을 재편·확대, 5년간 200만명 이상 청년에게 ▲학생 ▲구직자 ▲재직자 등 맞춤형 역량개발 지원(~30)
 - * (신설) AI·SW중심대학, AI 단과대·거점대, AI·AX 대학원, 중기재직자 AI 특화과정 등 (확대) 전장병 AI 온라인 교육 ('25) 3만명 → ('26) 50만명 등

< AI 등 신산업 분야 훈련 주요 사업 >

| 구분 | 사업명 | 주요내용 |
|------|--|--|
| 대학생 | 신규 AI-SW 중심대학 <small>과기정통부</small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AI 필수 교과목화, AI 학과 개설 등 대학 교육체계를 AI-SW 중심으로 혁신 * ('26) AI중심대학 10개, SW중심대학 51개 |
| | 신규 AI 단과대·거점대 신설 <small>과기정통·교육부</small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KAIST에 우선 설치('26)하고, 3개 과기원으로 확산, 교수·학생 정원 확대 * KAIST 운영모델을 향후 지역 거점대(교육부) 등에 적용·협업 ▶ 거점 국립대 중심으로 AI 단과대를 신설하여 지역의 AI 교육·연구 거점으로 육성 ('26. 3개교) * AI 단과대-거점대 협의체 구성·운영 |
| |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<small>교육부</small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대학·기업이 학부 대상으로 공동 개발·운영하는 AI 등 첨단산업 단기집중 교육과정 확대 * ('25) 반도체·이차전지·바이오 등, 47개교 → ('26) AI·미래차·로봇 분야 신규 선정, 88개교 |
| | 신규 AI 경진대회 <small>(AI활용 루키 대회)</small> <small>과기정통부</small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대학생 대상 AI 경진대회를 통해 AI 고급 인재 발굴 및 창업까지 연계 지원 * ('26) 6,000명 참여(목표) |
| 군장병 | 군장병 AI 온라인 교육 <small>국방부</small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전체 장병 대상으로 AI 온라인 교육 확대 * ('25) 3만명 → ('26) 50만명 |
| 대학원생 | 신규 AI·AX 대학원 <small>과기정통부</small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AI·AX 석박사 인재 양성을 위해 AI 핵심교육 및 기업+대학 협력형 AI 융합 특화교육 지원('26. 24개) |
| | ICT 석박사 인재 글로벌 파견교육 <small>과기정통부</small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ICT 분야 해외 우수대학과 연계한 국내 석박사생 파견교육*을 통해 글로벌 역량 제고 지원 * 카네기멜런대 AI심화, 토론토대 AI융합 등 교육과정 : ('25) 80명 → ('26) 100여명 |

| 구분 | 사업명 | 주요내용 |
|-------|---|--|
| 구직 청년 | 생성AI 선도 인재양성 <small>과기정통부</small> | ▶ 수요자 중심으로 국내 생성AI기업·대학이 공동연구, 석박사생 기업 파견을 통해 고급인재 양성 * ('25) 84명 → ('26) 216명 |
| | AI 반도체 분야 고급인재 양성 <small>과기정통부</small> | ▶ AI반도체대학원 (3개소)을 통한 HW/SW 융합 교육 등 석·박사급 선도 연구자 양성(연 90명) |
| | K-디지털트레이닝 <small>노동부</small> | ▶ 기업 및 대학 등과 협력, 기업 프로젝트 기반 AI·빅데이터 등 실무인재 양성 * ('25) 4.5만명 → ('26) 5만명 |
| | AI·SW 마에스트로 <small>과기정통부</small> | ▶ AI·SW분야 최고 전문가들의 집중멘토링과 심화교육 제공 등으로 전문인재 양성 * ('25) 110명 → ('26) 450명 |
| 재직 청년 | AI 이노아카데미 <small>과기정통부</small> | ▶ 3無(교재·강사·학비) 기반 혁신 AI·SW 교육 과정으로 혁신창의형 인재 양성 * ('25) 300명 → ('26) 1,200명 |
| | 가상융합기술 아카데미 <small>과기정통부</small> | ▶ AI 기반 가상융합산업 분야 취·창업 희망 청년 대상 개발·창작 교육 및 경진대회 등 운영 * ('26) 75명 → (~'30) 연 100명 |
| | 신규 중소기업 재직자 AI 특화 과정 <small>중기부</small> | ▶ 중소기업 재직자의 AI 리터러시 제고 교육* 및 AI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계약학과 신설** * ('26~'30) 10만명 ** ('26) 10개 개설 |
| | 중소기업 AI 기초·융합과정 <small>노동부</small> | ▶ 중소기업 재직자의 AI 훈련비 지원 * ('26) 기초과정 10만명, 융합과정 1만개 기업 |
| | 신규 AI 특화 공동훈련센터 <small>노동부</small> | ▪ 대기업 등의 우수 인프라를 통해 중소기업 재직자 등에게 직무기반 AI 훈련 제공 지원 * ('26) 20개 공동훈련센터 신설 |
| | 재직자 AID 집중과정 <small>교육부</small> | ▶ 성인 재직자 대상 'AI+X' 교육을 제공하는 재직자 AID(AI+Digital) 집중과정 지원 확대 * ('25) 30개교 → ('26) 38개교 |

- **(온라인 AI 교육센터)** **신규 STEP**(Smart Training Education Platform, 노동부), 국방 AI 교육플랫폼(국방부) 등을 연계, 청년 등 전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AI 교육센터('우리의 AI 러닝') 구축·운영
 - **STEP 플랫폼을 통해 구직·재직청년 대상 온라인 AI 활용 역량 강화 및 오프라인 직업훈련 연계**
- **(청년주도 AX)** AI 관련 역량을 갖춘 대학생들이 초·중·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AI 지식·경험을 나눌 수 있도록 지원*

* AI·SW 및 컴퓨터 관련 전공 학생 등을 대상으로 AI 분야 멘토링 사업 신설('26)

② 청년 과학기술인 성장 지원

- (이공계 장학금)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*(등록금 전액 및 학업장려비 등), 이공계 석·박사 우수장학금** (석사 연 500만원, 박사 연 750만원) 규모 단계적 확대
* ('25) 215명 → ('27) 595명 → ('30) 1,000명 ** ('25) 1,000명 → ('27) 4,500명 → ('30) 9,000명
- (연구생활장려금) 이공계 대학원생의 보편적 경제안전망 확충을 위해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확대* (석사 월 80만원, 박사 월 110만원 보장)
* ('25) 35개교 → ('26) 50개교 이상
- (박사후연구원 여건 개선) '대학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학교 구성원'으로 법적 지위 명문화(고등교육법 개정), 표준지침 제정·배포 등 안정적 연구여건 조성

③ 전문분야별 청년 인재양성 지원 확대

- 각 부처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▲ 에너지 ▲ 건축 ▲ 의료·의약품 ▲ 정보보안 등 분야별 청년 전문인재 14만명 이상 양성(~'30)

< 분야별 청년 인재양성 주요 사업 >

| 분야 | 사업명 | 주요내용 |
|--------|--|---|
| 건설·도시 | 청년 건설기능인 <small>국토부</small> | ▶ 건설기능등급제와 연계하여 직종별·등급별 현장 맞춤형 교육 제공 ('26. 300명) |
| | 스마트시티 혁신인재 <small>국토부</small> | ▶ 스마트시티 분야 석·박사급 전문인력 양성 및 장학금·연구비 지원 ('26. 285명) |
| 에너지 | 에너지 인력양성 <small>기후부</small> | ▶ 에너지신산업 분야 대학원 교육과정 강화 및 기업연계 R&D 지원 ('26. 2,554명) |
| | 에너지 차세대리더 육성 <small>기후부</small> | ▶ 에너지 신기술분야 박사후연구원 후속 연구 지원 ('26. 50명) |
| 바이오·의약 | 글로벌 규제과학 리더양성 <small>수의부</small> | ▶ 거점대학을 중심으로 혁신 제품 등의 개발·제품화 등 규제과학 인재 양성 ('26. 100명) |
| | 의약품 규제업무 전문가양성 <small>수의부</small> | ▶ 의약품 안전관리 전주기의 법적·과학적 규제업무 전문가 양성 ('26. 500명) |
| 기술·장비 | 연구장비분야 전문인력 양성 <small>과학기술정보통신부</small> | ▶ 연구장비 개발 및 시험분석 등 학위·비학위 과정 운영으로 체계적 전문인력 양성 ('26. 97명) |
| | 초고속 정보통신기반 인력양성 <small>과학기술정보통신부</small> | ▶ ICT 인프라 구축·유지보수 전문기술양성 (ICT폴리텍대학 산업학사 학위과정, '26. 320명) |

| 분야 | 사업명 | 주요내용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정보 보안 | 융합보안 핵심인재양성 <small>과기정통부</small> | ▶ 융합보안대학원을 통해 ICT융합산업의 보안인력 양성(26. 80명) |
| | 차세대 보안 리더 <small>과기정통부</small> | ▶ 정보보호 분야 청년층 대상 전문가 교육, 멘토링 및 훈련 제공(26. 160명) |
| | K-Shield 주니어 <small>과기정통부</small> | ▶ 사이버보안 직무 교육과정 운영 및 취업 연계로 실무인력 양성(26. 300명) |
| 해운 |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 <small>해수부</small> | ▶ 산학연계 인턴십 등을 통해 해운항만물류 청년 전문인력 양성(26. 120명) |
| | 청년해기인력 양성 <small>해수부</small> | ▶ 청년해기사 대상 맞춤형 실무특화교육 및 취업 지원(26. 180명) |
| 문화·콘텐츠 등 | 미래형 관광인재 육성 <small>문화부</small> | ▶ 여행상품 기획, 관광 마케팅 등 융합형 관광인재 양성교육 지원(26. 650명) |
| | 저작권 기술 글로벌 인재양성 <small>문화부</small> | ▶ 저작권 전문지식을 갖춘 글로벌 수준의 고급인재 양성(26. 50명) |
| | 지식재산 인재양성 <small>지재처</small> | ▶ IP중점대학 등 산업분야·지역별 특화교육을 통해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(26. 13,519명) |

(2) 교육-일자리 연계 강화

① 현장기반 대학 교육·실습 확대

- **(계약학과·정원 확대)** 대학-기업이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개발·운영하고 채용까지 연계하는 계약학과 및 계약정원 확대

※ 계약학과 정기 직무연수 개최 등 관련 기관 대학·지역·관련부처 의견 수렴 및 소통 확대
(25. 182개교 850개 계약학과·정원 운영중)
- **(현장실습 개선)** 규제특례 및 제도개선* 등을 통해 표준 현장실습 제도를 유연화하는 등 현장실습 제도 개선

* (예) 양질의 실습기관에 대한 지원규모 확대,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재정지원방식 유연화 등

② 산업계 맞춤형 공학인재 양성

- **(특성화대학원)** 첨단분야 특성화대학원(석·박사 과정)을 지역 특화 산업 등과 연계하여 지역으로 확대 추진(현재 14개소 중 9개가 수도권 소재)
 - * ('26) 지방 소재 대학 6개소 추가 지정 추진
- **(경력개발 지원)** 신규 박사후 연구원 대상 산학프로젝트 지원사업* 신설을 통해 우수 인재의 국내 산업계 연착륙 지원
 - * AX 분야 중심으로 기업대학원의 산학프로젝트 운영비·인건비 등 지원(박사후 연구원 100명)

③ 직업계고-전문대-대학 간 연계 강화

- **(직업계고-전문대 연계 강화)** 신규 직업계고-전문대간 교육과정 연계, 고교 선이수 과목 학점 인정을 통해 전문학사 학위 취득기간 단축(3+1 전문학사)
 - * ('26) 직업계고-전문대학 5개교 연계 지원 예정
- **(2+3 마이스터 학사 도입)** 신규 산업체 현장 경험(2년 이상)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, 학사학위 과정을 1년 단축(예: 4→3년)하는 학위취득 제도 마련*
 - * ('25~'26) 정책연구 및 모델 개발 등 → ('27) 제도 도입

④ 현장수요에 기반한 직업계고 청년 취업역량 제고

- **(현장교육 내실화)** 신기술·신산업 분야를 반영한 직업계고 학과 개편 지원, 우수 현장실습처 지속 발굴·모니터링 등 현장수요를 반영하여 교육 내실화
- **(취업 연계)**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* 운영, 미취업 직업계고 졸업생 취업지원,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** 등 조기 취업 지원 강화
 - * 직업계고 청년 대상 기업 맞춤형 직무교육 및 기업 채용 연계('26~'30, 1.5만명 내외)
 - ** 직업계고 및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참여 학생이 취직·근속시 장려금 지급 (최대 500만원, '26. 2만명)

(3) 청년의 교육 접근성 강화와 격차 해소

① 국가장학금 및 근로장학금 지원 확대

- **(국가장학금 확대)** 9구간 이하(전체 10구간) 대학생 대상으로 등록금 지원을 지속 확대*하여 학비 부담 완화('26. 약 125만명)

* 1~8구간의 연간 국가장학금 지원금액을 전년대비 10~40만원 인상('25.下~)

<2026년 국가장학금 연간 지원단가 (단위:만원)>

| 구분 (기준증원소득 대비 비율) | 기초차상위 (수급기준) | 1구간 (~30%) | 2구간 (~50%) | 3구간 (~70%) | 4구간 (~90%) | 5구간 (~100%) | 6구간 (~130%) | 7구간 (~150%) | 8구간 (~200%) | 9구간 (~300%) | 10구간 (300%~)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I 유형 | 전액 | 570 → 600 | | 420 → 440 | | 350 → 360 | 100 | | | | 미지원 |
| 다자녀 첫째둘째 셋째이상 | | 570 → 610 | | 480 → 505 | | 450 → 465 | 135 | | | | |
| | | | | 전액 | | | | | | 200 | |

- **개선** 소득·재산 등을 조사하여 지원금액을 산정되는 학자금 지원구간 체제를 개편하여 통계청 소득분위와 혼동 해소

- **(분야별 핵심인재 지원)** ▲ 인문사회계 ▲ 이공계 ▲ 예술체육계
▲ 전문기술인재 등 분야별 인재 장학금 지속 지원

【 분야별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】

- ▶ **(인문100년)** 인문사회계 우수인재의 등록금 및 생활비 지원(~'26, 2,000명 신규지원)
※ 지역사회 활동 참여 증빙시 장학금 대상자 선정 우대, 청년의 지역 네트워크 참여 유도
- ▶ **(이공계)** 이공계 분야 우수학생 등록금 및 생활비 지원(~'30, 10,370명)
- ▶ **(예술체육비전)** 예술체육계열 우수인재의 등록금 및 생활비 지원(~'26, 440명 신규지원)
- ▶ **(전문기술인재)** 취업역량 개발노력이 우수한 전문대 학생 등록금 및 생활비 지원(~'26, 1,140명 신규지원)

- 중소·중견기업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에게 등록금 전액 및 취·창업 지원금(200만원) 지속 지원

* 희망사다리장학금 I 유형 : ('26) 7,700건

- **(근로장학금 확대)** 대학생들이 일과 학업을 병행하며 장학금 지원과 직무 경험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원 지속 확대(연간 16만명)

② 학자금 대출 지원 확대

- **(지원대상 확대)** **개선**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(ICL)* 중 등록금 대출 신청 대상을 모든 재학생**으로 확대('25. 약 20만명 → '26. 약 30만명)
 - * 일정 소득 이상('25. 2,851만원) 발생 전까지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는 학자금 대출(금리 1.7%)
 - ** (현행) 학부생 9구간, 대학원생 4구간 → (개선) 학부생·대학원생 10구간(전구간)으로 확대
 - 대학원생의 경우 생활비 대출 신청대상도 확대(4 → 6구간)
- **(상환부담 경감)** **개선** 사회초년생의 학자금대출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이자면제 대상 확대(5 → 6구간) 및 이자면제 기간 확대
 - **개선** 지역대학에 재학하는 경우에는 이자면제 대상 추가 확대 검토

<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 확대>

| 구분 | 신청대상 | | | | 이자면제 | |
|----|------|-----|------|-----|-------|--|
| | 학부 | | 대학원 | | | |
| | 등록금 | 생활비 | 등록금 | 생활비 | 대상 | 면제기간 |
| 현행 | 9구간 | 8구간 | 4구간 | 4구간 | 1~5구간 | 졸업 후 2년의 범위 내 상환기준소득('25년 2,851만원) 발생 전까지 |
| 개선 | 10구간 | 8구간 | 10구간 | 6구간 | 1~6구간 | 상환기준소득('25년 2,851만원) 발생 전까지 |

③ 고졸 청년의 교육격차 해소

- **(고졸 재직자 장학금)** 고졸 청년이 취업 후에도 대학에 진학하여 학업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지속 지원*
 - * 희망사다리장학금 Ⅱ 유형 : ('25) 4,000건 → ('26) 5,000건
- **(고졸 재직자 역량개발)** 고졸 청년이 일과 학습을 병행하며 경력 단절없이 성장하며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 확대*
 - * 일학습병행 참여대상(입직 1년 → 3년) 및 후학습 과정 확대 등
- **(평생교육이용권 지원)** 저소득층 청년 등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강좌 및 교재비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 바우처(35만원) 지급
- **(온라인 교육 확대)** 온국민평생배움터,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(K-MOOC)* 및 매치업 강좌** 등 양질의 온라인 교육 확대로 접근성 제고
 - * 대학 등의 우수강좌를 온라인으로 제공('24년 기준 누적 2,805개 강좌 개발·운영)
 - ** 기업·교육기관 협업으로 신기술·신산업 분야 직무능력 향상 교육과정 운영 ('25년 기준 13개 분야 92개 교육과정 운영)

안심하고 머물수 있는 청년의 삶터 확산

- ◆ 청년 등을 위한 공적주택 40만호 이상 공급
- ◆ 청년 43만명+ α 월세 부담 경감 지원
- ◆ 전세사기 예방 및 임대차 관리·감독 강화 등 안전한 청년 주거 지원

(1) 청년친화주택 공급 확대

① 청년 공공주택 확대 및 내실화

- **(공공주택)** **신규** 청년 등을 위한 공적주택 40만호 이상 공급('26~'30, 구체적인 물량은 추후 확정)
 - 청년층 등이 내 집 마련이 가능하도록 청년 특별·우선공급 지속 운영 및 부담 가능한 수준의 공공분양 주택 적극 공급(~'30)
 - 청년층 선호 입지에 공공임대 공급 지속 확대(~'30) 및 품질·서비스 향상
 - 청년 등 주거복지 지원을 위해 수도권 도심 교통요지 등의 노후청사, 유휴 국·공유지 등을 활용하는 공공주택을 '30년까지 2.8만호 착공
 - 사업자별 분산된 공공임대 시스템을 일원화(^{가칭}대기자통합시스템)을 통해 공공임대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(시범운영 '27~)
- **(청년특화주택)** 청년·1인가구 등이 선호하는 특화 서비스(공유오피스, 피트니스 센터 등)와 임대주택이 복합된 청년특화주택 공급 확대
- **(기숙사형 청년주택)** 대학생 등 청년 수요가 많은 지역의 소형 주택을 임차 후 시세보다 저렴한 보증금·월세의 기숙사형 임대주택으로 공급
 - * 간담회 등을 통해 지역 수요 파악('25) → 학교·집주인·지자체 등 이해관계자 사전 협의 등을 통해 상생모델 발굴('26) → 주택 확보 등 시범사업 본격 추진(~'27)

② 기숙사 확충 및 노후 시설 개선

- **(기숙사 확충)** 국·공유지 및 폐교 부지 등을 적극 활용하여 수도권 등 기숙사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 확대
 - 국립대 학생들에게 신속한 기숙사 제공이 가능하도록 국립대 BTL 기숙사 확대 추진(~'30, 15개 추가 공급 고시)
 - 국·공유지 폐교 등을 활용하여 국·사립 대학생 등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연합기숙사 확충 지속 추진(~'30, 7개 추가 공급 협약)
- **(청년친화 시설개선)** 노후 기숙사 개축 리모델링 등으로 열악한 시설개선* 및 지역 상생을 위한 지역 주민시설 반영**
 - * 1인당 기준면적 확대($18m^2 \rightarrow 22m^2$)로 다인실을 1~2인실로 개선 스터디룸 등 각종 편의시설 강화
 - ** 지역상생 주민참여 협의체 구성, 체육·문화시설, 주차장 등 반영

③ 지역·일자리와 연계한 청년 친화 주거 모델 확산

- **(지역활력타운)** 청년층 등의 지방이전 유도 및 지역정착을 위해 범부처 협업으로 주거·생활인프라·생활서비스가 복합된 주거단지 조성*
 - * 27곳 대상지 선정(~'25), 매년 신규 사업대상지 발굴 및 사업 추진
- **(도심용합특구)** 지방 광역시(5곳)에 청년인재와 지역발전을 위한 산업·주거·문화 등 복합혁신공간* 조성
 - * 입지규제 완화 등을 통해 기업 지원공간과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문화·주거·상업시설을 도심에 종합 제공

(2) 청년 전·월세 등 주거비 부담 완화

① 청년 월세 부담 완화

- **(청년 월세지원)** **개선** 무주택·저소득 청년에 대한 청년월세 지원 ('22~'27)^{*}을 한시 사업에서 계속 사업으로 전환('26. 신규수혜자 6만명)
 - * 최대 월 20만원(월세), 24개월간 지원
 - **개선 월세 상승에 따른 청년 주거 부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의 단계적 확대 추진**(현행 기준 중위소득 60%인 소득요건 완화 등 검토)
 - ※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수혜인원 및 예산규모 추계를 위한 연구용역 추진('26)
- **(주거안정장학금)** 원거리 진학 저소득층 대학생 대상 수요맞춤형 주거안정장학금(관리비, 공동주거비, 월세 등) 지원
 - * 월세, 관리비, 공동주거비 등을 포함한 최대 월 20만원 ('26. 2.1만명)

② 청년 전용 저리대출 등 자금 지원

- **(주택구입자금 대출)** 사회초년생 등 청년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^{*} 및 저리의 청년주택드림 대출^{**} 제공
 - * ▲(가입대상)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
 - ▲(혜택) 납입한도 월 100만원, 우대금리 및 비과세(총급여 3천6백만원 이하) 적용
 - ** ▲(소득요건) 미혼 7천만원, 신혼 1억원 ▲(대출한도) 미혼 3억원, 신혼 4억원
 - ▲(만기) 최대 40년 ▲(금리) 연 2.40~4.15%
- **(전세자금 대출)** 청년 전용 베팀목 대출^{*}을 통해 무주택 청년에게 전세 자금 저리대출 지원(연 2.20~3.30%, 최대 10년)
 - * ▲(소득요건) 5천만원 이하 ▲(대출한도) 1.5억원
- **(보증료 지원)** 청년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시, 기납부한 보증료 한도 내에서 최대 40만원 지원
 - * ▲(소득요건) 청년 5천만원 이하 ▲(전세보증금) 3억원 이하

(3) 청년 주거 안정 강화

① 전세사기 예방·피해 지원 강화

- (안전계약 컨설팅) **신규**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* 역할 강화, 예비 임차인 대상 임대차 계약 전 권리관계 분석 등 안전계약 컨설팅 제공**(26.上)
 - * 서울, 인천, 경기, 부산, 대전, 대구, 광주 등 7개 지역 설치
 - ** 등기사항증명서의 권리관계 분석, 임대차 계약서 문구 등 사전 검토·컨설팅
 - ※ 군장병 대상 '전세사기 피해예방 교육' 도입(25.11~) → 교육대상 확대(사회복귀 앞둔 병사 등) 추진
- (정보 비대칭성 완화) **신규** 임대차계약 체결前 접근 정보를 확대*, 임대인-임차인간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하여 전세사기 발생 최소화(26)
 - * 다가구 확정일자 정보 제공(임대인 동의 불필요) 및 임대인 전입세대 확인서 제시 의무화,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대상에 신탁원부 및 건축물 대장 추가 등
- (전세사기 피해 지원) 공공임대 지원대상 확대 등 피해자 구제 강화*를 위한 특별법 개정 추진
 - * 공공임대주택 지원대상 확대, 위반건축물 피해자 신속 지원, 피해자 직접매입 개선 등

② 불법 건축물 등 감독 강화

- (주거 감독 강화) **신규** 부동산 특별사법경찰*을 통해 대학·역세권 등의 불법대수선(근생빌라, 방쪼개기) 등에 대한 관리·감독 강화
 - * 기존 공인중개사법, 부동산거래신고법, 주택법 위반 점검뿐만 아니라, 건축법 위반(불법 용도변경 및 무단 대수선) 등을 함께 점검
 - 건축규제 개선, 불법행위 예방, 단속시정 강화 등을 통해 위반 건축물 개선을 추진하여 청년층 주거 여건 개선
- ※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 발표(25.10) 및 관계법령 개정(26)

- **(허위매물 모니터링)** 청년 주거 수요가 높은 전국 주요 대학가·학원가 등 원룸촌 지역의 온라인 중개대상을 표시·광고 모니터링 강화*

* 기획조사 등을 통해 명시의무 정보 누락, 허위 거짓 광고 여부 등 집중 점검

③ 취약청년 주거 환경 개선

- **(주거상향 지원)** 반지하, 쪽방촌,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 청년 등의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및 이주비용 지원*

* 공공·민간임대 주택 이주시 이사·생활필품(40만원 실비) 지원

- **(최저주거기준 개선)** 개선 주거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 지원을 위해, 주거복지의 기준이 되는 최저주거기준 조정·개선 검토

※ 최저주거기준 조정을 위한 연구용역 진행('25.4~'26.4), 고시 개정('26)

④ 사회초년생 주거복지 및 상담체계 강화

- **(찾아가는 주거상담)** 청년센터·대학교 등에 직접 방문, 공공주택, 부동산 계약, 전세사기 예방 등 청년 맞춤형 주거 상담·정보 전달(월 1회 이상)

- **(주거복지센터 확대)** 지역사회 중심으로 청년·1인가구 등 대상 현장상담·이주 등을 밀착 지원하는 지자체 주거복지센터 확대

- **(맞춤형 정보제공)** 청년 등에게 공공주택·주거비 지원 등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 정보 제공 및 AI 자가진단 등으로 주거독립 지원

※ 현행 주거복지 정보 통합제공 포털인 마이홈 포털(홈페이지·앱) 고도화

청년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일상 안전망 구축

- ◆ 청년미래적금 신설 및 맞춤형 재무상담 확대로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 강화
- ◆ 다양한 청년의 삶을 포용하는 복지 사각지대 개선
- ◆ 청년의 K-컬처 선도, 창작 여건 개선 등 문화적 권리 향상

(1) 청년의 초기 자산형성 지원 확대

① 청년미래적금 신설(‘26.6)

- **신규 현행 청년도약계좌 대비 납입기간 단축(5→3년), 정부기여금 확대(3~6% → 6/12%), 대상 확대(+중기 재직청년*) 등 혜택을 강화**
 - * 당초 우대형(12%) 대상을 중기 신규 취직청년(6개월 이내) → 중기 재직청년으로 확대

[청년미래적금 주요내용]

- ▶ (내용) ▲ 월 납입금(최대 50만원)에 대해 3년 만기에 정부가 일정비율 금액(일반형 6% / 우대형 12%)를 매칭
 - ▲ 이자소득세 비과세 적용 (총급여 7,500만원(종합소득 6,300만원) 이하)
- ▶ (대상) ▲ 일반형 : 개인소득 6,000만원 이하 소득자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
 - + 가구 중위소득 200% 이하 청년
 ▲ 우대형 : 개인소득 3,6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 또는 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
 - + 가구 중위소득 150% 이하 청년
 * 일반형 소득요건 충족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는 우대형 분류
- ▶ (만기수령) ▲ 일반형 : 원금(1,800만원) + 정부기여금(108만원) + 이자
 - ▲ 우대형 : 원금(1,800만원) + 정부기여금(216만원) + 이자

② 군장병·초급간부 자산형성 지원 강화

- **(장병 내일준비적금)** 병사 대상 월 최대 55만원 납입시 정부 기여금 100% 매칭 + 비과세 혜택 지원 적금으로 청년병사 사회복귀시 목돈마련 지원
 - ※ 18개월간 최대 납입시, 원금(990만원) + 정부기여금(990만원) + 이자
- **(장기간부 도약적금)** **신규 초급 군간부 장기복무자 대상 최대 30만원 납입시 정부기여금 100% 매칭*(3년 만기)**
 - * (대상) 임관시 장기복무자, 단기복무자 중 장기복무선발자(약 9,500여명)
 - (만기수령) 원금(1,080만원) + 정부기여금(1,080만원) + 이자

③ 자산형성 연계 강화

- **신규** 청년들의 체감도·편의성 제고를 위해 청년자산형성 5종 세트 간 연계 방안 검토

※ 연구용역(26)을 통해 청년 자산형성 제도 간 연계강화 방안 및 체감도 강화방안 검토

【 청년자산형성 5종 지원사업 】

- ▶ (청년미래적금) 일하는 청년 대상 본인 월 저축액(최대 50만원)에 **6/12% 정부기여금 매칭**(중소기업 재직 청년 우대)
- ▶ (청년내일저축계좌) 저소득 청년 대상(증위소득 **100% 이하**) 월 저축액(10~50만원)에 대해 **정부지원금 10~30만원 정액지원**
- ▶ (장병내일준비적금) 군복무 청년 대상 월 저축액(55만원)에 **정부지원금 100% 매칭**
- ▶ (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) 주택청약을 **희망하는 무주택 청년**(연소득 5천만원 이하) 대상 우대금리 및 **비과세**(총급여 3천6백만원 이하) 등의 청약통장상품 지원
※ 장병내일준비적금, 청년내일저축계좌 만기금에 대해서는 **일시납 허용**(최대 5,000만원 이하)
- ▶ (서민형 ISA) 투자를 **희망하는 청년**(연소득 5천만원 이하)는 ISA 통장을 통해 예금·펀드·ETF 등 금융상품 운용 가능, **비과세 한도 400만원**

④ 청년 부채 부담 경감

- **(햇살론 유스)** 미취업·저소득 청년에게 저리로 자금 대출(연 5%)을 지원하여 제도권 금융 안착 지원 및 자금애로 지속 해소

- **신규 고졸 취업준비 청년 등에게 대학생 학자금(생활비) 대출금리*를 감안하여 햇살론 유스 대출금리 인하 추진**

* 생활비 대출(한국장학재단) : 연 1.7%, 연 400만원(학기당 200만원)

- **(채무조정 특례)** 금융채무 연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 및 미취업 청년에게 이자율 조정 등 채무조정 특례 지속 지원*

* ▲(이자율 조정) 일반 약정이자율의 30~70% 인하 → 청년 70% 인하
▲(채무 감면) 일반 상각채권원금의 20~70% 감면 → 청년 70% 감면

5 청년 금융상담 강화

- (맞춤형 금융상담) **신규** 금융 상담·조언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은행권·
서민금융통합센터 등을 통해 기초 재무진단, 전문가 재무상담 등 제공
※ 현행 '원스톱 청년금융 컨설팅'은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상담 제공,
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 확대
- (금융 시뮬레이션) **신규** 청년이 저축·대출·보험·투자 등 금융이용을
모의로 경험할 수 있는 체험형 금융교육 프로그램 도입 검토

6 청년 맞춤형 경제·금융교육 확대

- (맞춤형 콘텐츠) 청년들이 핵심 경제역량을 개발하고 미래 계획을
설계할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 제작 및 교육 확대*
* 경제배움e+에 맞춤형 학습관리시스템 구축(자산·위기관리 역량 강화 등), 군장병·대학생·
사회초년생 특화 프로그램 개발(AI 기반 개인 맞춤형 경제 진단, 재무 챌린지 등)
- (청년 경제캠프·콘서트) **신규** 대학생·사회초년생 등을 대상으로 경제교육 강
의, 토론, 협업 프로젝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경제 캠프 운영
- **신규** 대학 진학, 출산 등 청년 맞춤형 경제·금융 온라인 강좌
(K-MOOC)를 제작·확산하고 '청년 경제·금융 토크콘서트*' 개최
* 코인사기 예방법 등 실생활 맞춤형 주제로 오프라인 토크콘서트 운영

(2) 청년 복지 사각지대 개선

① 고립·온둔청년 및 가족돌봄청년 지원 확대

- (지원체계 강화) 위기청년 전담 지원기관 단계적 전국 확대*를
통해 위기청년 조기 발굴 및 밀착 사례관리 강화
* 청년미래센터 : ('25) 4개소 → ('26) 8개소
- (조기 발굴) **신규** 학교, 병원 등 종사자가 고립·온둔 위험·의심사례
발견시 청년미래센터에 직권 신청할 수 있는 체계 구축('26.3~)

- **신규** 위기청년의 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고(‘26, 3년 주기), 공공데이터 활용을 통해 정기적으로 고립·온둔 위기군 조기발굴(‘27~)
 - **(민간·지역 연계)** **신규** 고립·온둔청년을 지원하는 지역 민간 전문기관 대상 인증제 도입 및 지원을 통해 자율적 확산 도모(‘27)
 - **(일상회복 등 맞춤형 지원 강화)**
 - (고립·온둔청년) 초기 맞춤형 상담을 통해 청년 상황·고립도를 정확히 파악하고, 고립도에 따른 일상회복 프로그램 지원 및 정책 연계*
 - * 공동생활프로그램, 일경험 프로그램(가상회사) 등 고립도에 따른 맞춤형 지원, 일정정도 일상회복된 경우 청년도전지원사업 연계 등 자립시까지 책임 관리
 - (가족돌봄청년) 아픈가족 의료·돌봄서비스 연계, 청년 본인 성장에 초점을 둔 자기돌봄 계획 수립 및 자기돌봄비 지급(연 200만원) 단계적 확대
 - .**신규** 사회서비스 본인부담비율 할인*, 자활사업 참가 유예, 돌봄가족지원 확대 등 가족돌봄 특화지원 실시(‘26.3~)
- * (예) 일상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비율 5%p 추가할인

② 자립준비청년 지원체계 연계 강화

- **(지원연계 및 격차해소)** **신규** 아동양육시설(복지부), 청소년복지시설(성평등부) 등 퇴소*후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에 대한 지원 격차해소 등 연계 체계** 구축
 - * 아동양육시설(복지부), 청소년 쉼터·청소년자립지원관(성평등부) 등 관할 시설에 따라 퇴소 청년의 자립지원 내용, 체계 등이 상이
 - ** ▲가정 밖 청소년 대상 자립지원수당 지원요건 개선 및 자립정착금(지방정부) 전국 확대 등 지원 ▲복지로·사회보장정보시스템(복지부)-청소년안전망(성평등부) 연계·이용
- **(지원 체계화)** 자립준비청년이 경험하는 위기·유형 수요를 기반으로 위기도 조사지표 및 통합서비스 매뉴얼·교육 등 개편

- **(자립 지원)** 자립수당(5년간 월 50만원)·자립정착금(1,000만원 이상) 등 경제적 지원 및 전국 17개 시·도 자립지원 전담기관 기반 맞춤형 사례 관리 강화*
 - * 유형(자살위험 등)·이슈별(취업, 정신건강 등) 맞춤형 사례관리 매뉴얼 개발('26) 등을 통해 심리·정서 위기 대응능력 제고
- 자립 초기에 청년들에게 필요성이 높은 재무설계 및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자립역량 교육* 활성화 추진
 - * 경제·금융 관계부처(기재부, 금감원 등) 협력 기반 자립준비청년 특화 경제 교육 과정 개발 및 오프라인 기반 재무설계·교육 확대('26)
- **(주거 지원)**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(年 2천호)
- **(진로 지원)** 디지털 분야 창업 교육, 미디어 창작 교육, 디지털 기업 인턴십 등 직업체험 기회 제공을 통해 디지털 분야 진로 지원

③ 청년 복지 사각지대 개선

- **(가정 밖 청년)** **신규** 가족과 물리적·경제적·정서적으로 단절하여 스스로 자립해야하는 가정 '가정 밖 청년'의 실태조사 및 자립 지원방안 마련
- **(경계선 지능 청년)** **신규** 상대적으로 지원에 사각지대에 있던 경계선 지능 청년*(200명) 대상 기초소양구직기술 프로그램 신설(참여수당 20만원 지급)
 - * 지능지수(IQ) 71~84로서 지적장애(IQ 70 이하)에는 해당하지 않아 관련 통계·실태 미비하고 장애인으로서의 지원이 불가하나, 학습·사회참여·자립생활 등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
- **(청년 한부모)** 홀로 아동을 양육하는 저소득 청년 한부모(25~34세)의 생활안정과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아동양육비 추가 지원금 인상*
 - * ('25) 자녀 연령별 5~10만원 → ('26) 10만원 추가지급 (총 월33만원)
- **(청년 1인 가구)** 청년 1인가구 심리·정서상담, 자기개발·관계개선 교육* 등 사회관계망 형성 지원, 교류·식생활 등 생활역량 강화프로그램 내실화
 - * (예) 사회진입 예정자 독립생활 준비교육(정서·경제·생활유지 등), 원가족과의 관계 향상 프로그램, 금융·생활 기술, 문화·예술·체육 참여형 프로그램 등
- ※ 지원사업 가족센터 단계적 확대('25. 227개소 → '26. 232개소)

- **(장애인)** 대학 장애학생 지원센터 등을 통해 장애 대학(원)생의 교육 활동에 필요한 일반·전문 교육지원인력, 원격교육, 보조기기 등 지속 지원
- **(이주배경 청년)** 다문화 등 이주배경 청년(19~24세) 대상 한국사회 초기적응 지원 및 진로지원 프로그램, 상담 및 사례관리 등 지원

④ 청년 생계급여 분리지급 모의적용

- ※ 기초생활보장제도 청년 가구 기준 개선 및 모의적용 연구(복지부·보건사회연구원, '25.4~12)에 따라 6개월간 모의적용 실시 후 개선방안 평가 및 효과 검증 추진
- **(분리지급)** **신규** 기초생활수급자 부모와 따로 사는 19~29세 독립 청년에게 생계급여 분리 지급^{*}하는 방안에 대한 모의적용 실시
 - * (현행) 3인 가구(부모2+청년1)의 경우 약 160만원을 부모 1인(가구주)에게만 지급
→ (개선) 부모는 2인 가구 보장액 약 125만원, 청년은 1인 가구 보장액 약 76만원 지급
 - ※ 주거급여의 경우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분리 지급중('21~)
- **(개별가구 요건 개선)** **신규** 부모와 독립한 청년이 경제적 어려움이 있지만 부모와의 단절 등을 증명하기 어려워, 수급신청이 곤란하지 않도록 개별가구 인정요건 구체화 및 확대^{*} 검토
 - * (현행) 개별가구로 생계수급을 받기 위해서는, 기준 중위소득 50% 이상의 소득, 기타 가정폭력 등 별도가구 인정이 필요하다고 지자체가 판단한 경우에 가능
→ (개선) 부모의 경제적 지원 부재, 가족관계 해체 등 요건 확대 및 구체화
 - 분리 지급, 개별가구 인정요건 개선 모의 적용^{*} 실시('25.9~'26.2), 이후 성과평가·보완을 통해 제도화 검토
 - * 인천 계양구, 대구 달서구, 강원 철원군, 전남 해남군 4개 지자체 실시

(3) 청년 마음·신체건강 상호연계 지원 강화

① 청년 마음건강 조기발굴 지원

- **(조기 점검·관리)** 청년 정신건강검진 항목 확대 및 검사주기 단축으로 우울증·조기정신증 정신건강 문제 조기 발견 및 관리 지원^{*(25~)}
 - * (기준) 우울증 검사, 10년 주기 → (개선) 우울증·조기정신증 검사, 2년 주기

- 검진 결과 위험군 대상으로 ▲ 의료기관 첫 진료비 지원 ▲ 정신 건강복지센터 및 심리상담 바우처* 지원사업 연계('25~)

* 심리검사 및 대상자의 상황·수요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1:1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(8회)

- (상담 접근성 제고) **신규 마음건강 AI 시스템 시범 설치 등*** 비대면 기초 검진·상담 제공으로 정신건강 상담의 진입장벽 완화

* 익명·비대면 SNS 마음건강 상담앱('마들랜' : 마음을 들어주는 랜선친구) 확산, AI 키오스크를 청년센터, 주민센터 등에 설치 검토

- (심리상담 바우처)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청년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심리상담 바우처 본인부담금 면제로 지원 강화('25~)

② 마음건강 위험요소 관리 강화

- (중독 예방) 알코올, 마약류, 도박 등 청년층 중독문제 조기발견·대응을 위해 마약류 중독 치료보호기관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강화

* 마약류 중독 치료보호기관 : 중독여부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 지원('26. 31개소)
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: 알코올, 마약 등 다양한 중독문제 예방, 상담, 치료연계 등('26. 63개소)

- 지역사회 청년 중독예방 및 청년 중독자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청년 중독관리사업 실시(8개소)

③ 청년 자살예방 지원 확대

- (SNS 상담) **신규 고립·은둔 청년층 대상 온라인 채널을 통한 선제적·지속적 말벗*** 역할 제공, 정신건강 고위험군으로의 악화 예방

* 약 1,300명 내외 청년을 대상으로 수행

- (전화 상담) 지속 증가 추세인 상담 수요 대응을 위해 생명존중희망 재단 내 자살예방상담전화(109) 콜센터 활성화(2센터 개소, '25.10)

- **(AI 활용)** **신규** AI 활용 온라인상 자살유발정보 24시간 모니터링 및 자살예방상담 중 위기신호 조기 발견 시스템 개발 추진('25.下~)
- **(지역 연계)** **신규** 지역 청년지원센터에서 고위험 청년 발견시 지원기관 등으로 연계하는 발굴·지원체계 구축

④ 청년 신체건강 인프라 확대

- **(신체건강관리 지원)** 지역사회 청년사회서비스단*을 통해 사회 서비스단 참여 청년에게는 체육학 분야의 일경험 지원, 서비스 이용자에게는 신체건강증진 서비스 제공**
 - * 청년이 주체가 되어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회서비스 개발·제공
 - ** 개인운동 및 추가 프로그램(식단관리, 자세체형교정 등)으로 맞춤형 운동 서비스 제공
- **(생활밀착형 체육시설 확대)** 청년층이 생활에서 수영장, 체육관 등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체육시설 공급 확대

⑤ 청년 식생활 지원 확대

- **(천원의 아침밥)** 경제적 부담과 시간적 여유 부족으로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'천원의 아침밥' 지원규모 지속 확대*
 - * ('25) 연 450만명 → ('26) 연 540만명 → ('27~) 단계적 지속 확대
- **(직장인 든든한 한끼)** **신규** 중소기업과 산단 기업 근로자 대상 식비 보조 시범사업* 추진으로 외식비 부담 경감 및 건강한 식습관 지원
 - * (아침) 자부담 1천원에 쌀·쌀가공식품으로 구성된 아침식사 제공(4천명 대상)
 - (점심) 점심시간(11~15시) 외식업체에서 결제한 금액의 20% 할인 지원(5만명 대상)
- **(농식품 바우처)** 청년이 포함된 생계급여 수급 가구* 대상 맞춤형 농식품 지원 신설(1인가구 월 4만원, 4인가구 월 10만원)
 - * ('25) 임산부영유아아동 포함 생계급여 수급 가구 → ('26) 청년 포함 생계급여 수급 가구 추가

(4) 청년의 문화양유 및 생활지원 확대

① 청년의 문화콘텐츠 역량강화

- **(콘텐츠·OTT)** 청년 콘텐츠 예비창작자 멘토링·교육(年 300명), OTT·콘텐츠 특성화대학원 지원, 방송·광고* 등 청년들의 K-문화콘텐츠 선도 지원
 - * ▲ K-글로벌 방송영상콘텐츠 교육과정 ▲ 1인 광고콘텐츠 창작자 지원 등
- **(게임)** 이스포츠 전문인력 양성(年 2,000명), 게임인재원 운영 등을 통해 청년의 게임 기획, 이스포츠 산업 진출 지원
- **(애니·웹툰)** 애니메이션 제작인력 현장교육·인턴십(年 45명), 웹툰 창작 인력 양성(年 20명), 다양한 만화 콘텐츠 창작 지원(年 200여건)
- **(K-컬처 확산)** **신규** 국제문화교류 관심 청년(26. 700여명)에게 해외 일경험·문화활동 지원*, K-컬처 확산과 청년성장 함께 지원(K-컬처 글로벌 프런티어)
 - * ▲(자율기획형) 청년주도 현지 문화프로젝트(지역문화재단 협업, 태권도 봉사단 등) 수행
 - ▲(일경험형) 해외 현지 문화유관기관 일경험 사업 및 행정보조

② 청년 예술·창작 활동 지원

- **(창작여건 개선)** **신규** K-Art 청년창작자 지원, 청년예술인 예술활동 적립계좌 등을 통해 창작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조성

【 주요 청년 창작가 지원사업 】

- ▶ **(K-Art 청년창작자 지원)** 청년(만 39세 이하) 순수예술 원천창작자를 대상으로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 900만원 지원, 이를 통해 창작물 산출(26. 3,000명)
- ▶ **(청년예술인 예술활동 적립계좌)**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청년예술인(만 18~39세) 대상으로 2년간 월 적립액(최대 10만원)에 대해 1:1 정부 기여금 매칭(26. 6,000명)

- (청년문화예술가 육성) 국립예술단체 청년교육단원*, 국립청년예술단** 운영을 통해 청년예술인 공연·무대 기회 및 일자리 확대
 - * 청년예술인 전문교육, 활동지원금, 지역공연 출연 등 지원('26~'30, 2,500명 내외)
 - ** 전통연희, 한국무용, 연극, 오케스트라 4개 단체 프로젝트 단원으로 채용 및 공연 지원 ('26~'30, 6개 단체 650명 내외)
- 청년 신진 미술작가 발굴·육성(年 260명) 및 유망 청년예술가(아르코 청년예술가 지원, 年 80명) 지원으로 청년예술가 성장 지원

③ 청년 문화향유 기회 확대

- (청년 문화예술패스) **개선** 더 많은 청년에게 문화예술 경험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청년 문화예술패스의 지원 연령·지원금액(비수도권)·사용분야 확대*
 - * ▲ 연령 : ('25) 19세, 16만명 → ('26) 19~**20세**, 28만명
 - ▲ 사용분야 : ('25) 공연·전시 관람 등 → ('26) **영화 추가** → ('26후반) **도서추가**
 - ▲ 지원금액 : ('25) 최대 15만원 → ('26) 수도권 15만원, 비수도권 **20만원**
- (청춘마이크) '문화가 있는 날' 연계, 청년예술가에게 공연기회 및 공연비를 제공(年 80팀 내외)하여 청년 예술 활동은 물론 문화 향유 지원 확대
- (국·공립시설 청년할인) **신규** 국·공립 박물관, 미술관, 수목원 등 관람*에 청년 할인 확대를 추진**하여, 다양한 문화·관광 체험 확대 지원
 - * 현재 국립중앙박물관 전 연령 무료, 국립현대미술관은 만 24세이하 청년 무료 입장(상설 기준)
 - ** 단,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관람료는 자자체의 자율적인 결정 사항이나, 청년할인 유도 추진

④ 문화를 통한 취약청년 치유 확대

- (청년인문교실) 정서적 치유가 필요한 청년을 대상으로 독서·글쓰기 등 인문프로그램, 인구소멸지역과 연계한 체류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년들의 성찰 및 관계망 형성 지원

- (장애인 청년 창작지원) 발달장애인 문화예술학교 운영, 예비 장애예술인의 첫 예술 창·제작 준비과정 지원 등으로 장애청년의 예술활동 지원

5 청년 생활 밀착 지원

- (교통) **신규** 교통비 지출이 큰 청년 등을 대상으로 5.5만원으로 대중교통 (지하철·버스)을 이용가능한 K-패스 '모두의 카드' 신설
 - * ▲ 지하철·버스 : (청년·어르신) 5.5만원, (다자녀·저소득) 4.5만원, (일반) 6.2만원
 - ▲ GTX·광역버스 포함 : (청년·어르신) 9만원, (다자녀·저소득) 8만원, (일반) 10만원
 - 기존 K-패스(기본형)^{*}도 유지하여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혜택 확대
 - *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정기이용시 지출 금액의 최대 30% 환급
- (국민연금 보험료) **신규** 청년(18~26세)이 국민연금 가입 신청시 생애 첫 보험료 지원 추진
 - ※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비례해 늘어나는 구조로, 청년들이 조기에 가입하면 미래 연금 수령액도 증가하는 효과
 - **신규** 국민연금 '군 복무 크레딧'의 가입 인정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확대(26~), 향후 '군 복무기간' 전체로 확대 추진(법개정 필요)
 - * 육군·해병대 18개월, 해군 20개월, 공군·사회복무요원 21개월
- (장병 통신비 등) 군 장병 통신요금 할인율(현재 20%)을 확대 추진, 잔여 데이터 이월 및 데이터 선물하기(현재 월 2GB) 혜택 강화

청년이 이끄는 사회, 함께 만드는 미래

- ◆ 청년과의 국정대화,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확대(위촉비율 20% 이상)
- ◆ 청년정책조정위 전문위 설치·운영, 각 부처 청년보좌역 제도 내실화
- ◆ 자체 사회보장제도 협의절차 개선, 청년친화도시 확산 등 지역 청년정책 추진체계 강화

(1) 청년 주도 참여모델 확산

① 국가 주요 의제의 청년 당사자성 확대

- (청년과의 대화) **신규** 청년들이 청년정책*뿐만 아니라 국가 주요이슈**를 토론·논의할 수 있도록 청년과의 국정 대화·소통 플랫폼 운영

* 청년 일자리, 청년 교육, 청년주거, 청년문화, 청년복지 등

** 교육, 출생, 국민연금, 기후변화 등

[청년 국정대화 주요 플랫폼]

▶ 대통령 주재 청년과의 소통·공감 토크콘서트

- 청년농업인('25.9.16), 청년창업가('25.9.17), 다양한 청년들과 소통·논의('25.9.19)

▶ 국무총리 주재 미래대화 1·2·3 (K-토론나라)

- 교육, 일자리, 문화 등 다양한 주제를 미래세대와 소통하는 사회적 대화 플랫폼
 - * ▲1차 청년 참여('25.7.24, 서울) ▲2차 청년문화예술('25.9.10, 한예종) ▲3차 청년일자리 ('25.10.22, 대구) ▲4차 청년금융('25.11.28, 대전)
 - 참여 청년 등 포함, (가칭)「**미래대화 1·2·3 청년자문단**」구성을 통해 청년들과의 폭넓은 의견수렴 지속 추진

▶ 대통령비서실장 주재 청년미래자문단

- 중·장기적 사회이슈를 청년 관점에서 숙의하는 정책 자문단

- (온·오프라인 통합 청년 토론회) **신규** 청년과 관련된 핵심 국가의제들을 청년들이 온·오프라인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소통의 장* 신설 추진

* 오프라인 토론회에 청년들이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제안·투표 등을 통해 이슈 공론화 및 해결방안 모색

- (관계장관회의) **신규** 국무총리 주재로 주요 청년정책을 논의·결정하는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신설·운영, 청년 목소리의 정책 반영 등 정책의 추진력·실행력 제고

※ (논의안) ▲ 청년정책 관련 부처간 의견 조정 ▲ 정책 사각지대 발굴 ▲ 청년 제안(신문고, 공모전 등) 정책 반영 관련 조정 ▲ 지자체 우수 청년사업 전국 확산 등

② 청년 정책참여 기구 확대 및 강화

- (정부위원회 청년위원 확대) **개선** 정부위원회에 청년 위촉을 지속 확대하여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 전반에 미래주도세대인 청년의 참여 확대*

* '25년 기준 청년 위촉 정부위원회 227개 : 청년위원 위촉 비율 10% 이상

** 청년위원 위촉비율 20% 상향 추진(26년초 청년기본법 시행령 개정)

- 청년위원의 참여경험 확대·축적 및 향후 경력 활용 등 지원

- (청조위 전문위 설치) **개선** 청년들이 직접 사업을 제안·수립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전문위원회*(6개 분과, 60명) 설치·운영

* 6개 분과 : ▲ 일자리 ▲ 교육 ▲ 주거 ▲ 생활 ▲ 참여·권리 ▲ 기획·균형발전

- 분과별 정기 회의 등을 통해 청년들의 시각으로 직접 정책을 발굴·제안하고 소관 부처 검토 등을 거쳐 정책 반영

- (청년보좌역제도* 내실화) 분야별·부처별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목소리 반영하는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**

* 25개 장관급 부처에서 청년보좌역 및 2030자문단(20여명씩) 운영중

** (청년보좌역 선발) 기존 경력위주의 평가 → 정책제안서 평가를 추가하여 내실화

③ 청년의 정책참여 적극 유도

- (정책 피드백) **신규** 온라인 통합 청년정책 플랫폼('온통청년') 내에 온라인 투표 기능*을 신설하여 청년들이 쉽게 정책 피드백할 수 있는 통로 확대

* 청년정책 선호도 파악 및 청년세대 의견 수렴 등 활성화

- **(정책 제안)** 온통청년 内 청년신문고, 청년정책 공모전* 등을 통해 청년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안하는 기회를 확대
 - * '25년 공모전시 1,816건 접수, 이 중 개인민원·기조치 등 제외한 299건 검토·조정, 56건 수용
- **(참여 포인트제)** **신규** 청년의 정책참여 활동* 등을 등록하면 지원사업 참여
여시 우대, 활동 이력 축적 및 경험 활용 지원 등 포인트제 도입 검토
 - * 청년정책 공모전, 신문고, 청년정책 홍보 지원, 2030자문단, 정책네트워크 활동 등
 - ※ (참고) 전남 순천의 청년활동포인트제 : 시 주관 교육, 워크숍 등 참여, 봉사활동시 분기별 최대 10만원을 순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
 - **신규** 참여 분야부터 시범 도입하고, 지역사회 활동 및 일자리·주거 등 분야별 청년정책과 연계하여 확대 검토

(2) 청년친화적 전달체계 강화

① 청년친화 청년정책 전달체계 구축

- **(온통청년 고도화)** **신규** AI·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청년이 나이·소득·지역 등을 온라인 통합 청년정책플랫폼('온통청년')에 입력하면, 청년 개인별로 지원이 가능·필요한 청년정책들을 맞춤형으로 추천해 주는 기능 구축
 - **신규** 챗봇, 검색, 상담 등 축적된 개인의 상담 이력을 활용한 상담을 제공하는 맞춤형·쌍방향 시스템 마련
 - 각 지자체별 청년정책 플랫폼과 온통청년의 자동 연동을 통해 정책정보 통합 제공, 신속한 현행화 등 신뢰성 확보
- **(청년센터 활성화)** 지역 청년지원센터가 청년정책 사업의 지역 허브기관 역할*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편 추진
 - * 청년미래센터, 대학일자리+센터, 고용복지+센터 등과의 연계·협업체계 모색

- 지역 청년지원센터 등을 활용한 청년 교류 및 교육 등을 위한 청년 공간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사회 청년의 활력거점공간 제공
- **신규 주소지 기준뿐 아니라 청년의 생활·활동 지역에 맞춰 지역 청년지원센터 프로그램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추진***
 - * 프로그램 참여 대상에 해당 지역 생활·활동 청년(소재 대학·기업에 재학·재직 중인 청년, 소재지 창업자 등)도 포함되도록 개선 추진(지역 청년지원센터 협조, 운영매뉴얼 개선 등)

② 지역맞춤형 청년정책 추진체계 강화

- **(사회보장제도 협의절차 개선) 신규 지자체 자체 청년정책 추진의 자율성·신속성 제고를 위해 사회보장제도 신설·변경 사전협의 제도* 개선**
 - *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지자체는 사회보장제도 신설·변경시 복지부 사전협의가 필요, 그간 기준이 엄격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사업시기 지연 등 지자체 애로

⇒ 지자체 청년사업들은 국조실(청년정책조정실)에서 사전스크린 하여 신속협의 추진
- **사업 유형 분류***를 통해 절차·검토 수준을 차등화하고, 협의 제외 대상 확대 및 다빈도 사업 신속 협의 등 지자체 애로 개선
 - * ①소액·일회성 사업, ②유사·다빈도 사업, ③쟁점 사업, ④정책패키지 사업
- **(지역특화 청년정책)** 지역청년지원센터와 연계, 지역청년의 수요에 기반한 청년사업 발굴을 확대, 전국 확산 추진(‘지역 청년정책 실험실’)
 - * 기초 → 광역 → 중앙 청년지원센터 간 상향식(bottom-up) 제안체계를 확대하여 기초 청년지원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고, 청년지원사업에서의 청년 당사자성 확보
- **(청년친화도시 확산)** 지역과 청년이 함께 발전하는 ‘청년친화도시’를 매년 3개씩 지정·지원*하여 청년과 함께하는 정책 기반 확산
 - * 1차 청년친화도시(서울 관악구, 부산진구, 경남 거창군) 선정·발표('25.2)
- 지역별 맞춤형 청년정책 수립·운영을 위한 지자체 교육·컨설팅, 재정지원* 등을 통해 청년의 지역정주 여건 개선
 - * 첫 2년간 2.5억씩 총 국비 5억 지원(지방비 5억 매칭)

【 1차 청년친화도시 주요 사업 】

- ▶ (서울 관악구) 서울대 거점 '관악 S-밸리' 등으로 연계하여 취·창업 아카데미 운영, 고립·온둔청년 대상 청년 치유 힐링팜(텃밭·경작 등) 운영
- ▶ (부산진구) 서면·전포 유휴상가를 활용한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지원, 청년상인 공유 창고 지원, 청년예술가 전시공간 지원 등 청년상권·문화 특화 지원
- ▶ (경남 거창군) 근대건축문화유산 등 지역 공간자원 활용한 청년 주도의 기획·운영 활동 지원,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연계한 청년 창업 지원

- (청년발전지표) **신규** 청년의 발전, 삶의 질 등을 전국·시도·시군구 단위로 측정할 수 있는 '청년발전지표*'를 개발하여 지자체 제공

* (예) 청년이 주체가 되어 청년세대가 원하는 일자리, 주거, 교육, 문화, 복지 등을 발전 시켜나가고 체계적인 거버넌스를 갖춰 청년정책 과정에 참여가 강화된 상태

- 지자체에서 객관적인 '청년발전지표'를 근거로 지자체에 필요한 맞춤형 청년정책을 수립·추진·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

③ 청년 법령 등 인프라 강화

- (청년 연령기준 검토) **신규** 청년 사회진출 지연 추세 및 지자체 조례·타 법령 규정 등을 고려, 청년연령* 기준에 대한 연구 및 사회적 논의 등 검토

* 현재 청년기본법상 19세 이상 34세 이하, 지자체 청년조례는 대부분 39세 이하, 강원전남은 45세 이하

- **신규** 「청년고용촉진특별법」상 청년연령(현행 15~29세) 상한을 「청년기본법」과 동일하게 상향(29세 → 34세) 추진(25.下)

- 청년 정책참여, 성장 등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법령 지속 빨굴·정비

- (청년의 삶 실태조사) 설문문항 확대 및 세분화 등 실태조사 고도화를 통해 신뢰도·활용도 제고, 데이터 기반 청년정책 수립 지원 강화

* '22년, '24년에 이어 '26년 등 격년 실시 예정

- (청년인재 DB) 분야·지역별 청년인재 발굴을 위한 청년추천제 및 AI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청년인재 매칭 등 정책결정 과정에 청년 참여 지원 강화

* '23.1월 개통 이후 현재까지 34,000여명 청년 프로필 등록

- (청년지원 전담체계) **신규** 청년정책 전반을 통합 전달하고 청년참여를 지원하는 지속가능한 청년지원 전담기관인 '한국청년정책진흥원' 신설 추진
 - 온·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 통합 운영, 청년지원 프로그램 개발, 청년정책 분야 인재 양성 등 청년정책 종합 지원
- (청년특화 연구역량 강화) **신규** 청년 관점 특화연구, 청년위원 참여 및 정책지원 등을 위한 청년정책 연구 추진체계 구축

(3) 청년 공동체 및 교류 지원 확대

① 청년 지역공동체 활성화

- (청년마을 발전) 지역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기획·운영하는 청년마을* 모델을 발전시켜 청년 지역 유입과 공동체 회복 지원
 - * 청년이 주도하여 지역 살아보기(지역탐색), 일거리 실험(특산물·관광 등 지역자원 활용), 청년 활동공간(사무실, 숙소 등) 확보 및 행사(주민 교류) 등 기획·운영
- 민·관 협력 및 비즈니스 연계*로 지속 가능한 마을 운영모델 구축, 청년과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'상호 성장의 장' 마련
 - * ▲ 지역자원 활용 생산품 등의 코레일 매장 유통 지원 ▲ 삼성생명(주), 새마을금고, 한국공항공사 등 ESG·EAP 사업과 연계한 지역 일거리 창출·관광상품 개발 등
- (지역공동체 활성화) 청년 지역공동체 활동 지원을 통해 청년의 지역문제 해결 및 지역정착 지원
- (청년두레 지원) 지역 청년공동체가 주도하는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역관광('청년두레') 창업 및 경영 지원('26~'30, 100개)

② 청년주도 국제교류 확대

- (아태 청년교류단) **신규** APEC 성과 계승, K-컬처 확산, 글로벌 연대 강화 등을 위해 한·미·중·일 4개국을 아우르는 청년 문화교류 플랫폼 '(가칭)아태 청년교류단*' 설치·운영
 - * (예) 한·미·중·일 4개국 청년 각 50여명이 참여하여, 각국에 상호파견·체류, 문화체험 등 교류 및 네트워크 형성 유도(단계적 확대 추진)
- (공동학위·교류) CAMPUS Asia(한중일, AIMS)를 통해 한·중·일 3국 및 아세안 국가간 공동·복수학위 운영 및 학생 교류 지원(~30, 누적 3만명)
- (분야별 국제교류) ▲한·미 첨단분야 ▲한·일, 한·중, 한·베 청년교류 ▲국가유공자 후손교류 등 분야별·국가별 청년 국제교류 지속 확대

【 주요 청년 국제교류 지원사업 】

- ▶ (한·미 첨단분야 인재교류) 이공계 인재를 美 주요대학에 파견하여 첨단산업 분야의 기술·경험 습득 기회 제공(26. 540명)
- ▶ (청년교류) 한·중, 한·베 청년교류 등을 통해 상호 방문 및 교류·문화체험 지원(26. 165명)
- ▶ (후손교류캠프) 유엔참전국·국내 대학생, 유엔참전용사 및 가족 등을 대상으로 현지 후손들과 전적지·보훈시설 견학 및 네트워크 구축(26. 255명)

③ 청년세대 성별균형 문화 확산

- (공론의 장) **신규** 성별 불균형 의제에 대해 청년들이 직접 공론화 및 숙의 과정을 거쳐 청년의 시각을 반영한 정책대안 도출
- (정책 제안) **신규** 온·오프라인 청년 의견수렴을 통한 성별 불균형 사례 및 정책과제 제안제도 운영
- (인식 개선) **신규** 공모전 등 성별 고정관념 해소를 위한 인식개선 추진

VI. 향후 계획

1.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를 통한 점검·관리

- 「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('26~'30)」을 구체화한 연도별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
※ 「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」 수립 예정('26.3)
- 제2차 기본계획 목표 달성 및 과제 이행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여, 소관부처별 정책 집행

2. 정책 점검·관리 및 평가를 통한 환류

- 기본계획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정기적 추진상황 점검·관리
* 국조실 청년정책조정실장 주재 부처 청년정책 책임관회의 수시 개최
- 청년신문고, 온라인 투표 게시판 등을 통해 청년들의 정책 체감 및 평가 지속 점검
- 정부업무평가에 기본계획 등 부처별 청년정책 추진실적·성과 반영 확대→ 평가결과 환류를 통해 정책 개선·보완

3. 정책체감도 제고를 위한 홍보·소통 활성화

- 주요 청년정책에 대한 온·오프라인 홍보*를 강화하여 청년들에게 정책 인지도와 체감도 제고
* ▲(온라인) 네이버, 카카오, 온통청년, SNS 등 ▲(오프라인) 리플릿, 우수사례 자료집 등 배포
- 청년과의 소통 확대 및 참여 활성화를 통해 청년 의견 지속 수렴, 새로운 정책수요 발굴 및 개선

1. 일자리 분야 (80개 과제)

| 연번 | 과제명 | 소관부처 |
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
| (1) 청년 '첫 일자리'와 '다시 서기' 지원 확대 (32개) | | |
| ① 청년 조기 사회진출 지원 | | |
| ① | 청년 일자리 창출 기업 지원 확대 | 노동부·기재부 등 |
| ② | 국비지원 기업 R&D 수행시 청년고용 우대 검토 | 과기정통부 |
| ③ | 청년 일자리 지원 연계 강화 | 노동부·국조실 등 |
| ④ | AI 기반 1:1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| 노동부 |
| ⑤ | 임금분포 및 근속기간 등에 기반한 경력설계 지원 | 노동부 |
| ⑥ | 청년 대상 국가기술자격증 응시료 지원 확대 | 노동부 |
| ② 쉼→회복→재진입 지원 강화 | | |
| ① | 일자리 첫걸음 플랫폼 구축·운영 | 노동부 |
| ② | 쉬는 청년 특화 일경험 프로그램 활성화 | 노동부 |
| ③ | 청년도전지원사업 | 노동부 |
| ④ | 구직촉진수당 확대 | 노동부 |
| ⑤ | 자발적 이직 청년 생애 1회 구직급여 지급 | 노동부 |
| ⑥ | 갭이어 지원방안 검토 | 국조실 등 |
| ⑦ | 청년 실패·재도전 지원 프로그램 강화 | 국조실 등 |
| ③ 노동시장 연착륙을 위한 역량 제고 지원 | | |
| ① | 대학 진로지도 강화 | 교육부 |
| ② | 청년장병 취·창업 지원 강화 | 국방부 |
| ③ | 병역진로설계 서비스 제공 | 병무청 |
| ④ | 사회복무요원의 안정적 사회진출 지원 | 병무청 |
| ⑤ | 청년 제대군인 취업지원 강화 | 보훈부 |
| ⑥ | 탈북청년 취업역량 강화 | 통일부 |
| ⑦ | 군장병 대상 AI 온라인 교육 확대 | 국방부 |
| ⑧ | 군장병 대학 원격강좌 학점취득 지원 확대 | 국방부 |
| ⑨ | 군장병 전자책 구독·구매 지원 | 국방부 |
| ⑩ | 일자리 첫걸음 캠페인(민간기업 일경험 확대) | 노동부 |
| ⑪ | 무대기술 인턴십 | 문체부 |
| ⑫ | 공예 청년인턴십 지원 | 문체부 |
| ⑬ | ICT 학점연계 프로젝트 인턴십 | 과기정통부 |
| ⑭ | 중앙부처 청년인턴 운영 | 국조실 |
| ⑮ | 공공기관 청년인턴 운영 | 기재부 |
| ⑯ | 해외 일경험 확대(지방청년 재외공관 파견 등) | 외교부 |
| ⑰ | AI 분야 특화 직업훈련 과정 확대(K-DT) | 노동부 |
| ⑱ | AI 청년인재 취업연계 지원 | 중기부 |
| ⑲ | 대기업 공동훈련센터 확대 | 노동부 |
| (2) 청년의 일자리 기회를 다양한 지역·분야로 확대 (13개) | | |
| ① 지역 중소기업 유입 및 근속 지원 | | |
| ① |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| 노동부 |
| ② | 참 괜찮은 강소기업 선정 및 취업 연계 | 중기부 |
| ② 지역 인재양성-일자리-정착 패키지 지원 강화 | | |
| ① | 청년 지역일자리 및 정착 지원 강화 | 노동부·국조실 등 |
| ② |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(지역 인재 양성) | 교육부 |
| ③ |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 | 국토부 |
| ③ 청년의 준비된 영농진입 및 정착지원 | | |
| ① | 청년농 농지·주거 지원 | 농식품부 |
| ② |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| 농식품부 |
| ③ | 정예 청년농업인재 양성 | 농식품부 |
| ④ | 농업인 퇴직연금형 저축 도입 | 농식품부 |

| | | |
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
| ④ 청년의 어업 도전 지원 | | |
| ① | 청년바다마을 조성 | 해수부 |
| ② |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 | 해수부 |
| ③ | 어선청년임대 지원 | 해수부 |
| ④ | 청년 창업임대형 양식단지 조성 | 해수부 |
| (3) 청년 노동환경 개선 및 권리보호 (12개) | | |
| ① 청년 노동권익 보호 | | |
| ① | 청년 대상 AI 노동법 상담 제공 | 노동부 |
| ② | 소규모사업장 대상 AI 노동법 준수 자율점검 지원 | 노동부 |
| ③ | 중소기업 일터 안전 강화 지원 | 노동부 |
| ② 플랫폼·프리랜서 노동자 권리보호 | | |
| ① | 「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」 제정 | 노동부 |
| ② | 플랫폼·프리랜서 노동자 실태조사 | 노동부 |
| ③ | 단기근로·알바·프리랜서 등 경력 인증 지원 | 노동부 |
| ③ 청년 선호 기업복지 확대 지원 | | |
| ① | 중소기업 복지카드 시범사업 추진 | 노동부 |
| ② | 유연근무 확대 등 일·가정 양립 기업환경 조성 | 노동부 |
| ③ | 가족친화 인증기업 확대 | 성평등부 |
| ④ 중소기업·산단 근무환경 개선 | | |
| ① | 중소기업 복지시설 바우처 지원 | 중기부 |
| ② | 청년이 일하고 싶은 중소기업 만들기 캠페인 | 노동부 |
| ③ | 문화선도산단 조성 | 산업부 등 |
| (4) 청년이 안심하고 도전하는 창업생태계 구축 (23개) | | |
| ① 청년 창업 도전 지원 강화 | | |
| ① | 청년창업사관학교 내 딥테크 글로벌 심화과정 신설 | 중기부 |
| ② | 딥테크 창업중심대학 지정 및 딥테크 창업기업 지원 | 중기부 |
| ③ | 이공계 대학원생 청년창업 탐색지원 | 과기정통부 |
| ④ | K-디지털 그랜드 챔피언십 | 과기정통부 |
| ⑤ |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| 중기부 |
| ② 부처별 전문분야 특화 창업 지원 강화 | | |
| ① | 전통문화 청년창업 육성 지원 | 문체부 |
| ② | 게임 기획 지원 | 문체부 |
| ③ | 미디어 청년창업 지원 | 방미통위 |
| ④ | 환경분야 청년창업 생태계 구축(환경창업대전) | 기후부 |
| ⑤ |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| 기후부 |
| ⑥ | 스마트건설 창업기업 육성 | 국토부 |
| ⑦ | 기타 소관 분야 청년창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 발굴 및 개선 | 전부처 |
| ③ 청년창업기업 투자·판로지원 확대 | | |
| ① | 청년전용창업자금 지원 | 중기부 |
| ② | 청년 창업기업 보증(테크스타 보증 포함) 지원 | 중기부 |
| ③ | 혁신창업펀드 조성 | 중기부 |
| ④ | 대학창업펀드 조성 | 교육부 |
| ⑤ | 청년창업기업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 도입 | 중기부 |
| ④ 청년창업기업 법률·세제 등 지원 확대 | | |
| ① |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구축 | 중기부 |
| ② | AI 등 신산업 분야 청년창업기업 세제지원 확대 | 중기·기재부 |
| ③ | 청년 리딩그룹 1천명 프로젝트 | 과기정통부 |
| ⑤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청년창업 안전망 구축 | | |
| ① | 청년 재도전 지원 전용트랙 운영 | 중기부 |
| ② | 재창업 청년 대상 예비 창업 지원사업 추가 지원 | 중기부 |
| ③ | 중장년과 청년의 공동창업 지원 확대 | 중기부 |

2. 교육·직업훈련 분야 [70개 과제]

| 연번 | 과제명 | 소관부처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
| (1) 청년 미래역량 교육 확대 (47개) | | |
| ① AI·SW 등 미래역량 교육 확대 | | |
| ① | AI·SW 중심대학 | 과기정통부 |
| ② | AI 단과대·거점대 신설 | 과기정통·교육부 |
| ③ |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| 교육부 |
| ④ | AI 경진대회('AI활용 루키 대회') | 과기정통부 |
| ⑤ | AI·AX 대학원 | 과기정통부 |
| ⑥ | ICT 석·박사 인재 글로벌 파견교육 | 과기정통부 |
| ⑦ | 생성 AI 선도 인재양성 | 과기정통부 |
| ⑧ | AI 반도체 분야 고급인재 양성 | 과기정통부 |
| ⑨ | AI·SW 마에스트로 운영 | 과기정통부 |
| ⑩ | AI 이노아카데미 | 과기정통부 |
| ⑪ | 가상융합기술 아카데미 | 과기정통부 |
| ⑫ | 가상융합기술 랩 | 과기정통부 |
| ⑬ | 중소기업 재직자 AI 특화과정 신설·운영 | 중기부 |
| ⑭ | 재직자 AI·디지털(AID) 집중과정 지원 | 교육부 |
| ⑮ | 온라인 AI 교육센터 구축·운영 | 과기정통부 |
| ⑯ | STEP 플랫폼을 통한 AI 활용 직업역량 강화 지원 | 노동부 |
| ⑰ | 교육현장 청년 AI 지식·경험 공유 | 교육부 |
| ② 청년 과학기술인 성장 지원 | | |
| ① | 이공계 대학원생 장학금 확대 | 과기정통부 |
| ② |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| 과기정통부 |
| ③ | 박사후연구원 연구 여건 개선 | 과기정통·교육부 |
| ③ 전문분야 청년 인재양성 지원 | | |
| ① | 건설기술인 진입장벽 완화(역량강화 교육) | 국토부 |
| ② | 청년 건설기능인 양성(맞춤형 교육) | 국토부 |
| ③ | 스마트시티 혁신인재 육성 | 국토부 |
| ④ | 에너지인력양성(R&D) | 기후부 |
| ⑤ | 에너지차세대리더육성 | 기후부 |
| ⑥ | 글로벌 규제과학 리더양성(R&D) | 식약처 |
| ⑦ | 의약품 규제업무 전문가 양성 교육 | 식약처 |
| ⑧ | 연구장비분야 전문인력 양성 | 과기정통부 |
| ⑨ | 초고속 정보통신기반 인력양성 | 과기정통부 |
| ⑩ | 융합보안 핵심인재양성 | 과기정통부 |
| ⑪ | 차세대 보안 리더 | 과기정통부 |
| ⑫ | K-Shield 주니어 | 과기정통부 |
| ⑬ |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양성 | 해수부 |
| ⑭ | 청년해기인력 공급기반강화 | 해수부 |
| ⑮ | 미래형 관광인재 육성사업 | 문체부 |

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
| ⑯ | 저작권기술 글로벌 인재 양성 | 문체부 |
| ⑰ | 혁신성장을 이끌 미래 지식재산 인재양성 | 지식재산처 |
| ⑱ | 국토교통 과학기술 신진연구자 지원 | 국토부 |
| ⑲ | 제로에너지 건축 전문인력 양성 | 국토부 |
| ⑳ | 국토공간정보 인력 양성 | 국토부 |
| ㉑ | 녹색 융합기술 인재 양성 | 기후부 |
| ㉒ | 제약 스마트공장 혁신기술 인재양성 | 식약처 |
| ㉓ | 의료기기 규제과학 전문가 양성 | 식약처 |
| ㉔ |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전문인력 양성 | 식약처 |
| ㉕ | 정보보호특성화대학 | 과기정통부 |
| ㉖ | 수산업 현장 맞춤형 전문인력양성 | 해수부 |
| ㉗ | 기타 부처별 소관 분야 청년 전문인재 양성·지원 | 전부처 |
| (2) 교육-일자리 연계 강화 (11개) | | |
| ① 현장기반 대학 교육·실습 확대 | | |
| ① | 계약학과·계약정원 확대 | 교육부 |
| ② | 대학생 현장실습 제도개선 | 교육부 |
| ② 산업계 맞춤형 공학인재 양성 | | |
| ① |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(교육훈련, 해외연계, 특성화대학원) | 산업부 |
| ② | 박사후 연구원 산학프로젝트 지원 사업 | 산업부 |
| ③ 직업계고-전문대-대학 간 연계 강화 | | |
| ① | 직업계고-전문대 간 교육과정 연계(3+1 전문학사) | 교육부 |
| ② | 2+3 마이스터 학사 지원 | 교육부 |
| ④ 현장수요에 기반한 직업계고 청년 취업역량 제고 | | |
| ① | 신산업 분야 직업계고 학과개편 지원 | 교육부 |
| ② | 직업계고 학생 현장실습 내실화 | 교육부 |
| ③ | 직업계고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지원 | 교육부 |
| ④ | 고졸자 후속관리 지원모델 개발 | 교육부 |
| ⑤ |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| 교육부 |
| (3) 청년의 교육 접근성 강화와 격차 해소 (12개) | | |
| ① 국가장학금 및 근로장학금 지원 확대 | | |
| ① |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및 소득구간 개편 | 교육부 |
| ② | 우수학생 국가장학금(인문100년, 예술체육비전) | 교육부 |
| ③ | 우수학생 국가장학금(전문기술인재) | 교육부 |
| ④ | 이공계 분야 우수학생 장학금 지원 | 과기정통부 |
| ⑤ |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(희망사다리 I) | 교육부 |
| ⑥ | 대학생 근로장학생 지원 | 교육부 |
| ② 학자금 대출 지원 확대 | | |
| ① | 학자금대출 지원대상 확대 및 상환부담 경감 | 교육부 |
| ③ 고졸 청년의 교육격차 해소 | | |
| ① |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(희망사다리 II) | 교육부 |
| ② | 고졸 재직자 역량개발 | 노동부 |
| ③ |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| 교육부 |
| ④ | 온국민평생배움터 운영 | 교육부 |
| ⑤ |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(K-MOOC) 운영 | 교육부 |

3. 주거 분야 (28개 과제)

| 연번 | 과제명 | 소관부처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(1) 청년 친화 주택 공급 확대 (13개) | | |
| ① 청년 공공공주택 확대 및 내실화 | | |
| ① | 청년층 대상 공공분양주택 공급 | 국토부 |
| ② | 국유재산 복합개발을 통한 청년 공공주택 공급 | 기재부 |
| ③ | 청년 맞춤형 공적 임대주택 공급(통합공공임대) | 국토부 |
| ④ | 청년 맞춤형 공적 임대주택 공급(매입임대) | 국토부 |
| ⑤ | 청년 맞춤형 공적 임대주택 공급(전세임대) | 국토부 |
| ⑥ | 청년 맞춤형 공적 임대주택공급(공공지원민간임대) | 국토부 |
| ⑦ | 공공임대 대기자통합시스템 구축 | 국토부 |
| ⑧ | 청년특화주택 공급 | 국토부 |
| ⑨ | 기숙사형 청년주택 공급 | 국토부 |
| ② 기숙사 확충 및 노후 시설 개선 | | |
| ① | 대학생 주거부담 경감(기숙사 확충) | 교육부 |
| ② | 기숙사 청년친화 시설 개선 | 교육부 |
| ③ 지역·일자리와 연계한 청년 친화 주거 모델 확산 | | |
| ① | 지역활력타운 조성 | 국토부 |
| ② | 도심융합특구 조성 | 국토부 |
| (2) 청년 전·월세 주거비 부담 완화 (5개) | | |
| ① 청년 월세 부담 완화 | | |
| ① | 청년월세지원 계속사업 전환 및 지원 확대 | 국토부 |
| ② |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| 교육부 |
| ② 청년 전용 저리대출 등 자금 지원 | | |
| ① |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지원 | 국토부 |
| ② | 청년전용 저리대출상품 운영 | 국토부 |
| ③ |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| 국토부 |
| (3) 청년 주거 안정 강화 (10개) | | |
| ① 전세사기 예방·피해 지원 강화 | | |
| ① | 전세 사기 예방 지원(안전계약 컨설팅 등) | 국토부 |
| ② 불법건축물 등 감독 강화 | | |
| ① | 불법대수선 관리·감독 강화 | 국토부 |
| ② | 위반건축물 개선 | 국토부 |
| ③ | 대학가, 원룸촌 부동산 허위매물 등 수시모니터링 | 국토부 |
| ③ 취약청년 주거 환경 개선 | | |
| ① | 고시원 등 거주청년 주거상향 지원 | 국토부 |
| ② | 고시원 등 거주청년 이주비용 패키지 지원 | 국토부 |
| ③ | 최저주거기준 조정·개선 | 국토부 |
| ② 사회초년생 주거복지 및 상담체계 강화 | | |
| ① | 찾아가는 청년 주거 상담 | 국토부 |
| ② | 지역 주거복지센터 확대 | 국토부 |
| ③ | 온라인 기반 주거 정보 전달 및 상담 시스템 개선 | 국토부 |

4. 금융·복지·문화 분야 [71개 과제]

| 연번 | 과제명 | 소관부처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|
| (1) 청년의 초기 자산형성 지원 확대 (11개) | | |
| ① 청년미래적금 | | |
| ① | 청년미래적금 신설 및 운영 | 금융위 |
| ② | 청년미래적금 세제 지원 | 기재부 |
| ② 군장병·초급간부 자산형성 지원 강화 | | |
| ① | 장병내일준비적금 지원 | 국방부 |
| ② | 장기간부 도약적금 | 국방부 |
| ③ 자산형성 연계 강화 | | |
| ① | 청년 자산형성 5종 연계 강화 | 국조실 등 |
| ④ 청년 부채 부담 경감 | | |
| ① | 햇살론 유스 운영 | 금융위 |
| ② | 고졸 미취업 청년 대출 지원 | 금융위 |
| ③ | 청년 채무조정 특례 | 금융위 |
| ⑤ 청년 맞춤형 금융상담 강화 | | |
| ① |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운영 | 금융위 |
| ⑥ 청년 맞춤형 경제·금융교육 확대 | | |
| ① | 청년 맞춤형 경제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| 기재부 |
| ② | 청년 경제·금융 토크콘서트 개최·운영 | 교육부 |
| (2) 청년 생활·복지 사각지대 개선 (20개) | | |
| ① 고립·은둔 및 가족돌봄 청년 지원 확대 | | |
| ① | 위기청년 전담 지원기관 확대 | 복지부 |
| ② | 위기청년 위험·의심사례 발견시 학교, 병원 종사자 등의 직권신청 체계 구축 | 복지부 |
| ③ | 위기청년 조기발굴 시스템 구축 | 복지부 |
| ④ | 고립·운둔청년 지원기관 인증제 및 지원 등 | 복지부 |
| ⑤ | 고립·은둔청년 상담 및 일상회복 프로그램 지원 | 복지부 |
| ⑥ |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 지원 확대 | 복지부 |
| ⑦ | 가족돌봄청년 특화 지원 | 복지부 |
| ② 자립준비청년 지원체계 연계 강화 | | |
| ① | 자립준비청년 지원연계 및 격차 해소 | 복지·성평등부 |
| ② | 자립준비청년 위기도 조사지표 및 통합매뉴얼·교육 개편 | 복지부 |
| ③ |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및 자립역량 교육 지원 | 복지부 |
| ④ | 자립준비청년 주거 지원 | 국토부 |
| ⑤ | 자립준비청년 디지털 진로 지원 | 과기정통부 |
| ③ 청년 복지 사각지대 개선 | | |
| ① | 가정 밖 청년 실태조사 및 지원 | 복지·성평등부 |
| ② | 경계선 지능 청년 자립 지원 | 노동부 |
| ③ | 청년 한부모 자립 지원 | 성평등부 |
| ④ | 청년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| 성평등부 |
| ⑤ | 대학 장애학생 지원센터 운영 강화 | 교육부 |
| ⑥ | 이주 배경 청년(19~24세) 지원 | 성평등부 |
| ④ 청년 생계급여 분리지급 모의적용 | | |
| ① | 청년 생계급여 분리 지급 모의적용 | 복지부 |
| ② | 생계급여 지급 개별가구 요건 개선 | 복지부 |

| | | |
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
| (3) 청년 마음·신체건강 상호연계 지원 강화 (13개) | | |
| ① 청년 마음건강 조기발굴 지원 | | |
| ① | 청년 정신건강 검진·관리 강화 | 복지부 |
| ② | 청년 마음건강 AI 시스템 등 시범 설치 | 복지부 |
| ③ | 심리상담 바우처 지원 | 복지부 |
| ② 마음건강 위험요소 관리 강화 | | |
| ① |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내실화 | 복지부 |
| ② | 마약류 중독·오남용 예방교육 지원 | 식약처 |
| ③ 청년 자살예방 지원 확대 | | |
| ① | 고립·온둔 청년 대상 선제적·지속적 SNS상담 실시 | 복지부 |
| ② | 청년 자살예방을 위한 자살예방상담전화 확대 | 복지부 |
| ③ | 지역 청년지원센터와 연계 강화 등 지역 연계 | 복지부·국조실 |
| ④ 청년 신체건강 인프라 확대 | | |
| ① | 청년 신체건강관리 지원(지역사회 청년사회서비스단) | 복지부 |
| ② | 생활밀착형 체육시설 공급 확대 | 문체부 |
| ⑤ 청년 식생활 지원 확대 | | |
| ① | '천원의 아침밥' 지원 확대 | 농식품부 |
| ② | 직장인 든든한 한끼 시범사업 추진 | 농식품부 |
| ③ | 농식품 바우처 지원 확대 | 농식품부 |
| (4) 청년의 문화향유 및 생활지원 확대 (27개) | | |
| ① 청년의 문화콘텐츠 역량 강화 | | |
| ① | 콘텐츠 창의인재 동반 | 문체부 |
| ② | OTT·콘텐츠 특성화 대학원 지원 | 문체부 |
| ③ | K-글로벌 방송영상콘텐츠 교육과정 운영 | 문체부 |
| ④ | 이스포츠 전문인력 양성 | 문체부 |
| ⑤ | 게임인재원 운영 | 문체부 |
| ⑥ | 1인 광고콘텐츠 창작자 지원 | 문체부 |
| ⑦ | 애니메이션 제작인력 양성 | 문체부 |
| ⑧ | 만화콘텐츠 창작 지원 | 문체부 |
| ⑨ | 웹툰 창작인력 양성 | 문체부 |
| ⑩ | 청년 K-컬처 글로벌 프론티어 | 문체부 |
| ② 청년 예술·창작 활동 지원 | | |
| ① | K-Art 청년창작자 지원 | 문체부 |
| ② | 청년예술인 예술활동 적립계좌 | 문체부 |
| ③ | 예술인 예술활동준비금(창작준비금) 지원 | 문체부 |
| ④ | 국립예술단체 청년교육단원 | 문체부 |
| ⑤ | 국립청년예술단 | 문체부 |
| ⑥ | 신진작가 화랑전속계약 활동 지원 | 문체부 |
| ⑦ | 아르코 청년 예술가 지원 | 문체부 |
| ③ 청년 문화향유 기회 확대 | | |
| ① | 청년문화예술패스 | 문체부 |
| ② | 문화가 있는 날 청춘 마이크 | 문체부 |
| ③ | 청년 문화·관광시설 할인 확대 | 문체부 |
| ③ 문화를 통한 취약청년 치유 확대 | | |
| ① | 청년인문교실 | 문체부 |
| ② | 발달 장애인 문화예술학교 지원 | 문체부 |
| ③ | 예비 장애예술인 창·제작 준비과정 지원 | 문체부 |
| ④ 청년 생활 밀착지원 | | |
| ① | 대중교통비 지원 | 국토부 |
| ② | 청년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| 복지부 |
| ③ | 국민연금 군 복무 크레딧 확대 | 복지부 |
| ④ | 장병 통신비 등 지원 확대 | 과기정통·국방부 |

5. 참여·기반 분야 (33개 과제)

| 연번 | 과제명 | 소관부처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|
| (1) 청년 주도 참여 모델 확산 (8개) | | |
| ① 국가 주요의제의 청년 당사자성 확대 | | |
| ① 청년과의 국정대화 강화 | | 국조실 |
| ② 온·오프라인 통합 청년 토론회 | | 국조실 |
| ③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| | 국조실 |
| ② 청년 정책참여 기구 확대 및 강화 | | |
| ① 정부위원회 청년위원회 확대 | | 국조실 |
| ②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전문위원회 설치 | | 국조실 |
| ③ 청년보좌역제도 내실화 | | 국조실 |
| ③ 청년의 정책참여 적극 유도 | | |
| ① 청년정책 온라인 소통 및 제안 확대 | | 국조실 |
| ② 청년 정책 참여 포인트제 도입 | | 국조실 |
| (2) 청년친화적 전달체계 강화 (11개) | | |
| ① 청년친화 청년정책 전달체계 구축 | | |
| ① 온라인 통합 청년정책플랫폼(온통청년) 고도화 | | 국조실 |
| ② 오프라인 지역 청년지원센터 활성화 | | 국조실 |
| ② 지역맞춤형 청년정책 추진체계 강화 | | |
| ① 청년정책 사회보장 협의제도 개선 | | 복지부 |
| ② 지역특화 청년사업 확대 | | 국조실 |
| ③ 청년친화도시 확산 | | 국조실 |
| ④ 지역별 청년발전지표 개발 및 제공 | | 국조실 |
| ③ 청년 법령 등 인프라 강화 | | |
| ① 청년 연령기준 검토 및 법령 정비 | | 국조실·노동부·법제처 |
| ② 청년의 삶 실태조사 고도화 | | 국조실 |
| ③ 청년인재 DB 고도화 | | 국조실 |
| ④ 청년정책진흥원 신설 | | 국조실 |
| ⑤ 청년정책 연구역량 강화 | | 국조실 |
| (3) 청년공동체 및 교류 지원 확대 (14개) | | |
| ① 청년 지역공동체 활성화 | | |
| ① 청년마을 발전 | | 행안부 |
| ② 청년 지역공동체 활성화 | | 행안부 |
| ③ 관광두레 조성 (청년두레 지원) | | 문체부 |
| ② 청년주도 국제교류 확대 | | |
| ① (가칭)아태청년교류단 설치 | | 국조실·문체부·외교부 등 |
| ② 미래세대간의 교류사업 활성화(후손교류캠프) | | 보훈부 |
| ③ 국외 보훈사적지 답사 미래세대 참여 | | 보훈부 |
| ④ 대학생 대상 해외연수 기회 확대(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) | | 교육부 |
| ⑤ CAMPUS Asia – 한중일/AIMS | | 교육부 |
| ⑥ 아세안 TVET 학생교류 사업 | | 교육부 |
| ⑦ 청년 주도형 국제교류 활성화 | | 외교부 |
| ⑧ 한-미 첨단분야 인재 교류 | | 산업부 |
| ③ 청년세대 성별균형 문화 확산 | | |
| ① 차별·불이익 이슈 현황 분석 및 제도 개선안 검토 | | 성평등부 |
| ② 성별 불균형 사례 및 정책과제 제안제도 운영 | | 성평등부 |
| ③ 성별 불균형 관련 공론장 운영 등 소통 강화 | | 성평등부 |

